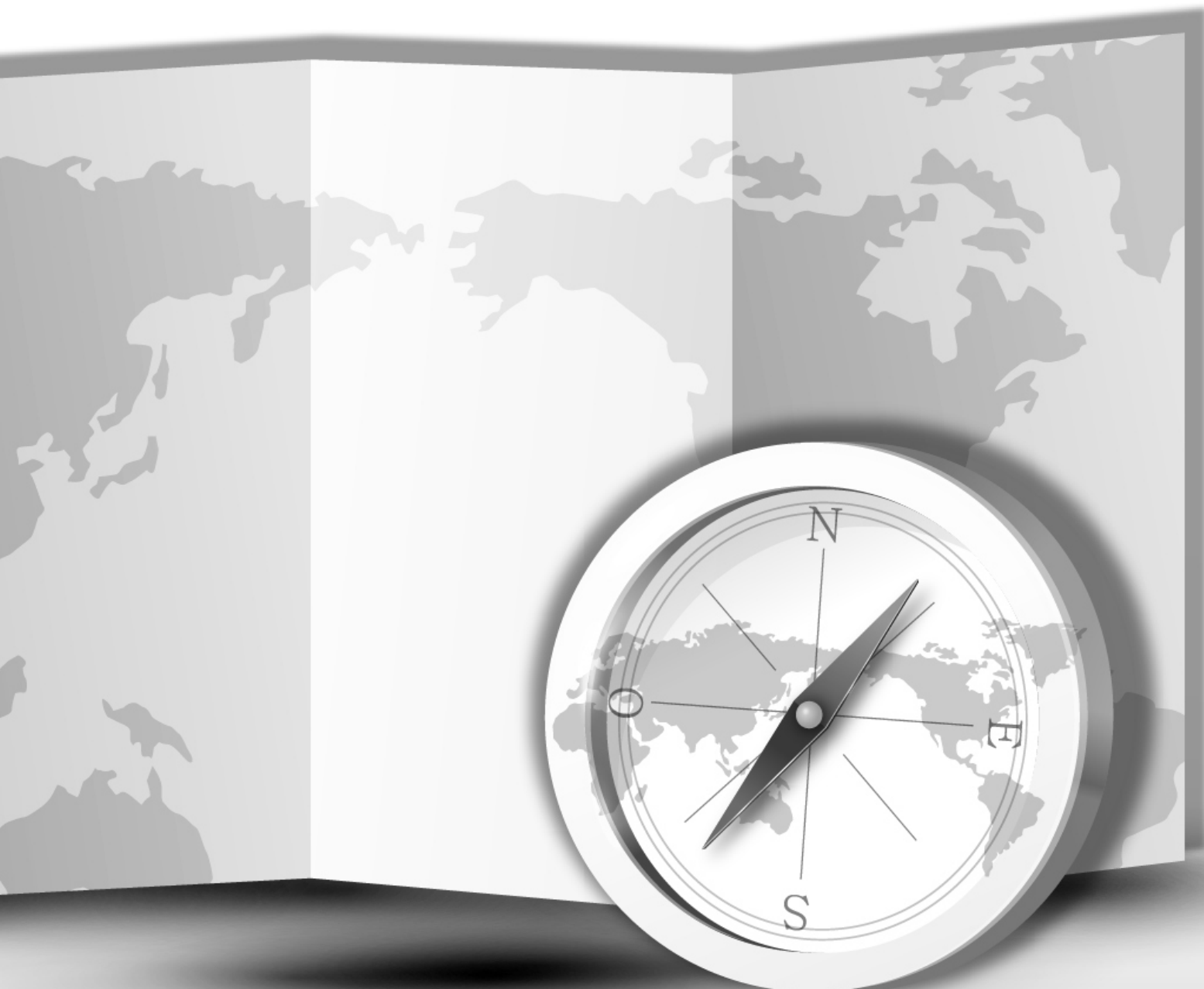


2010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제2차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사료해제·척도개발 계통분류·지원모델





Program

등록(13:00~13:30)

| 제1회의 (13:30~15:10) 사료해제와 척도개발

사회 :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주제1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 II - 구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

발표 : 성상환(독어교육학)

토론 : 김 면(연세대)

주제2 북한 이미지와 대북태도 : 사회심리적 척도개발과 분석

발표 : 박명규(사회학)

토론 : 윤광일(정치학과 BK사업단)

휴식(15:10 ~ 15:30)

| 제2회의 (15:30~17:10) 계통분류와 지원모델

사회 : 이순형(생활과학)

주제3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 한반도 다람쥐의 종 분류와 계통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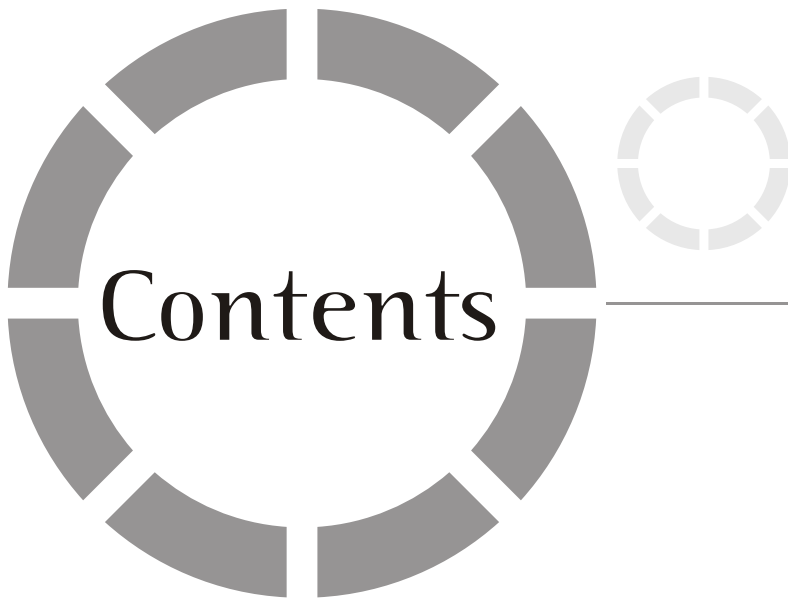
발표 : 이 항(수의생화학)

토론 : 김 원(생명과학부)

주제4 남한에 정착한 탈북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모델개발

발표 : 박상민(가정의학)

토론 : 김종홍(국립의료원)



Contents

| 제1회의 : 사료해제와 척도개발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 II
구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 / 7

발표 : 성상환(독어교육학)

북한 이미지와 대북태도 : 사회심리적 척도개발과 분석 / 19

발표 : 박명규(사회학)

| 제2회의 : 계통분류와 지원모델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한반도 다람쥐의 종 분류와 계통지리 / 53

발표 : 이 향(수의생화학)

남한에 정착한 탈북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모델개발 / 69

발표 : 박상민(가정의학)

| 제1회의 (13:30~15:10) 사료해제와 척도개발

사회 :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주제1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 II - 구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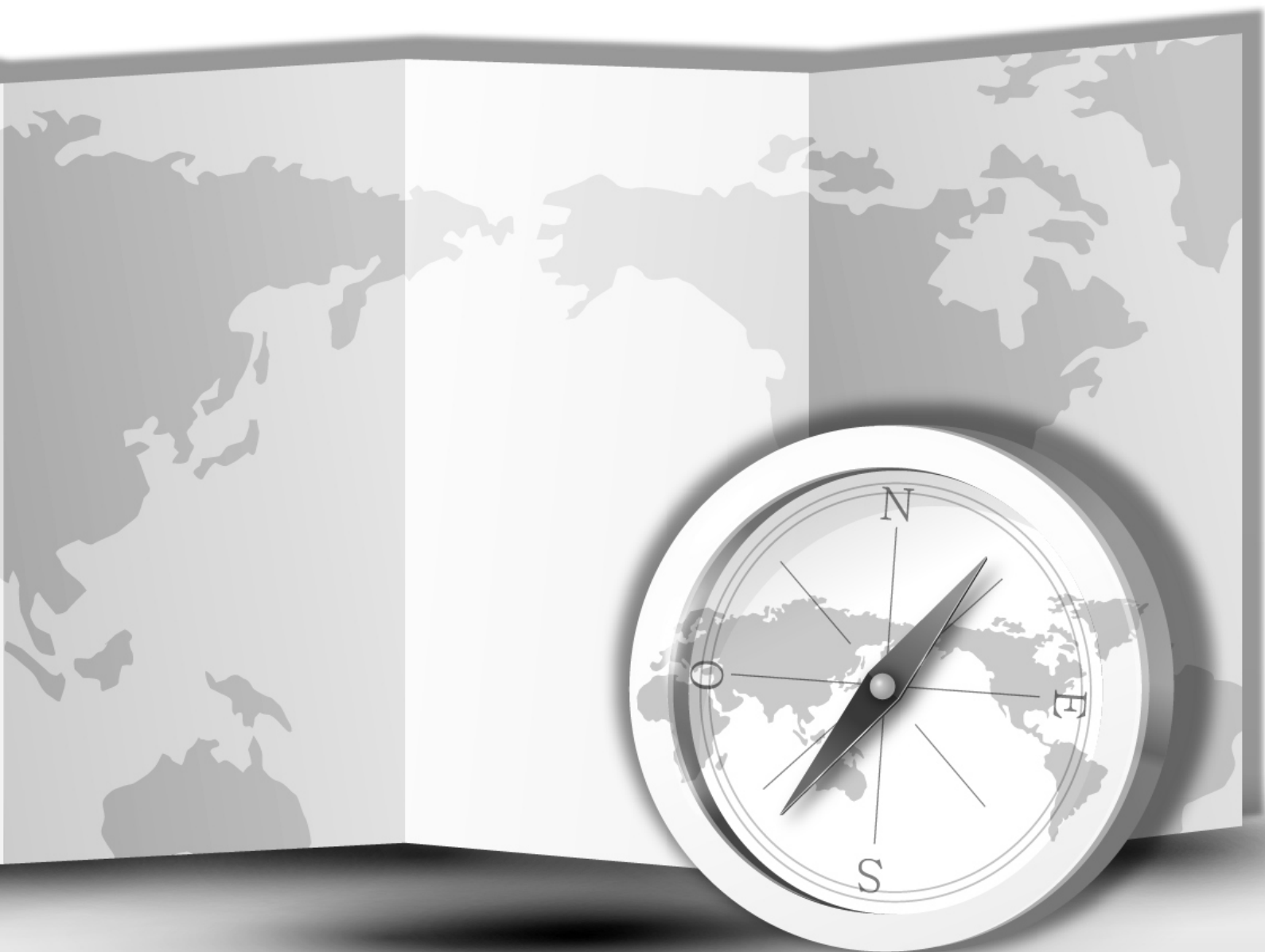
발표 : 성상환(독어교육학)

토론 : 김 면(연세대)

주제2 북한 이미지와 대북태도 : 사회심리적 척도개발과 분석

발표 : 박명규(사회학)

토론 : 윤광일(정치학과 BK사업단)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 II

-구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

성상환(서울대 독어교육과)

1. 도입

통일학연구와 관련하여 북한의 내부적인 사료의 부족은 기존의 통일학 관련 연구들에서 결여되었던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체제와 북한정부의 외교-통일전략에 대한 공산진영 내부의 제 3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념적인 민족분단국가로서 전적으로 소련의 노선을 추종해야했던 구동독정부의 입장에서 관찰한 북한관련 외교 사료들은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의 1차 연구는 구동독외무성에서 해제된 자료 중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의 북한관련 사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성상환 2008). 이번 2차 연구는 1960년에서 1970년까지의 북한관련 사료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정부가 취한 외교적 태도변화를 우선 북한과 동독간의 관계변화를 통해 이해하고, 아울러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진행된 북한정부의 시소외교를 파악하며, 북한정부의 체제유지와 유일체제노선의 진행을 분석한다.

북한과 구동독의 역사는 냉전 체제에서 주로 같은 진영에 섰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형제애를 통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양국이 직접 만나는 몇 가지 역사적 교차점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 지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두 나라간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했다는 관점을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다. 단지 외교문서상 나타나는 표면상, 외면상의 친선과 협력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측면 외에도 미묘한 갈등과 근본적인 소통의 어려움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동독이 국제무대에서 사라진 후 동독의 문서보관소가 개방되면서 진실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쟁은 온갖 비극을 초래했지만, 동독과 북한 관계 발전에 주요한 촉매작용을 했다. 한반도는 1945년 이후 당시 국제관계의 특징이 되는 냉전의 첫 실제적인 상징이 되었다. 한국전쟁에 대한 구동독 언론의 보도는 당시의 냉전 사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구동독에서는 흔히들 강대국인 미국이, 작지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북한을 남한의 미국 „하수인들“의 지지를 받아 공격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북한은 용감히 싸웠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연합국의 도움을 받아 막강한 적에 대항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독립과 사회주의 이념을 수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cf. Frank 2004).

2. 구동독과의 협력관계

구동독의 자료 등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1953년부터 1958년까지는 북한이 경제제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기간이었다. 이 기간에 특히 주목할 만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가 큰 몫을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초기 연대는 형제적 우의에 의한 지원이었다(cf. MfAA. A 10258, 1954-1961: 북한의 여러 산업시설 건설과 동독의 지원 사항).

연대운동은 이러한 공적인 선전활동과 더불어 일차적으로는 구호품 전달에 집중되었는데, 이들 물자들은 긴 열차행렬을 통해 시베리아를 거쳐 북한에까지 수송되었다. 문서기록에 의하면 이미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나타난 양국의 관계상과 그 배후에서 벌어지는 일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1년 말, 북한이 동독에 원조강화를 요청했을 때 외무부는 발터 울브리히트에게 "자원 기부를 확충하라"는 제안을 했다(오토 그로테볼 수상 유고, NL 182/1240, Bl.2, Frank 1996에서 재인용). 초기의 자발적, 무제한적 원조태세는 곧 타산성으로 대체되었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갔다. 북한은 동쪽진영에서 냉전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김일성에게는 북한 재건과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동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정견(政見)을 교묘히 활용했다. 서신교환을 보면 동지적 원조를 호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고 어떤 협정을 관철시키려는 듯한 문체다(cf. Frank 1996, 2004):

‘북조선 인민공화국 정부는 ... 상기한 장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장비들은 조속한 경제구조 재편성 및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북조선 인민공화국 정부는 ... 필요한 장비 ... 조달을 위한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그로테볼 총리에게 보낸 1956년 9월 11일자 김일성의 서신, 오토 그로테볼의 유고, NL 90/481, Bl. 229)

베를린의 동독정부는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다. 패전과 폭격으로 나라가 심각히 파괴된 상태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산업시설과 철도를 폐쇄했고, 막대한 전쟁 복구비용까지 치러야 했다. 상황은 서독, 특히 서베를린과의 경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기록을 보면 대규모 원조 강화를 요청하는 평양에 대해 동독 당국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는지 알 수 있다(cf. Frank 1996, 2004):

‘로이쉬너 동지에게 COMECON(상호 경제 협력 회의)에 동독의 북한원조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동독은 협정에 체결된 한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동독 사회주의 통합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정례 회의록 No. 27)

북한과 동독 양국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총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라면 함흥시 재건이었다. 함흥은 함경남도의 도청소재지이자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함흥은 한국전쟁으로 80~90%가 파괴된 상태였다. 이 프로젝트는 후에 함흥의 항구와 산업시설로까지 확장되었다. 이 지역에서 독일의 기술자들은 1930년대 세계 정상급 화학공장 설립에 기여했었다. 이 프로젝트의 시발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지만 제네바에서 북한 사절단을 만난 오토 그로테볼 총리의 제안에 따라 동독 사회주의 통합당 정치국은 7월 6일 북한의 한 도시를 재건하기로 결정한다 (Frank 1996, 2004):

‘우리는 북한의 한 도시를 재건하자는 그로테볼 동지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1954년 7월 6일 정치국 회의록 No. 15, J IV 2/2/371, Bl. 3)

프로젝트 실행기간은 1955~1964년이었고, 산업건물, 병원, 하수도시설, 운송망, 교각, 교육시설, 관공서 건물, 공원, 상가 등을 포함한 함흥시와 흥남의 총체적 재건을 내용으로 했다. 프로젝트 전반기에 동독은 각종 장비와 건축자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것을 조달했다. 가장 급박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활발한 건설업을 구축하는 것과 숙련된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동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조정신을 강화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문서보관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유용한 자료목록은 Frank 1996 참조).

후반기의 원조는 재정, 그리고 도시설계와 같은 전문 사업에 집중되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동독은 야심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공부한 북한 학생들은 훗날 교수가 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도시설계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독은 북한의 건설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MfAA, A 10260. 1956-61. 북한과의 기술과학 협력(TWZ)).

원래 함흥재건을 위해 예정된 북한을 위한 동독의 자금은 약 2억 4백만 동독마르크였다. 이는 1960년 동독의 내각 평의회 결의를 통해 9천백만 마르크가 줄어든 1억 천 3백만 마르크로 축소되었다. 원래의 원조규모를 생각해서 약 2백 9십만 마르크가 함흥을 위해 예정된 시설장비와 반제품을 위해 준비되었다. 동독정부는 북한이 처음에 예정된 함흥에 있는 콤비나트 시설부분을 동독의 원조액 삭감 후 아마 자체적으로 완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부분은 신용공여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MfAA, A 10260. 1956-61. 북한과의 기술과학 협력(TWZ)).

함흥이라는 도시의 재건에 있어 동독의 많은 물적 도움이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프롤레타리아적인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동독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 동독

인민회의 대표단이 함흥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열렬한 환영에도 불구하고¹⁾ 특히 다음의 1959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의 동독인민회의 대표단의 방북에 대한 평가서를 보면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보다 명확해 진다(MfAA, A 10286 Aussenpolitische Beziehungen der DDR zur KVDR 1958-1960, s. 100-104):

1. 정치적 결과들

동독인민회의 대표단의 방북은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번 방문은 첫 번째 의회대표단의 방북으로 이는 의회일과 관련한 협력사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특별히 제네바 외무장관회담 전날의 방문은 권위와 존경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보여주었다.

대표단에 대한 열렬한 환영, 대표단의, 특별히 마테른 동지의 군중들과 당 간부들 앞에서의 연설, 대표단의 체류동안 대표단과 독일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들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드높여주었고 세계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독일의 평화조약체결이 또한 제네바 외무장관회담과 독일 문제들이 여기 북한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우리는 또 우리에게는 항상 중심에 서 있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북한 동지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우리가 이미 보고했듯이 우리 대표단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사이의 의회 일에 대한 경험교환은 원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북한친구들이 그들의 의회 일에 대해 말해줄기를 꺼렸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 생각에 그들이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로서 의회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당과 정부의 행정가로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측에서 먼저 우리 인민회의의 경험들을 전해주고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표단의 짧은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우리 대표단의 김일성 주석 생가 방문이었다. 생가에서의 김 주석과 그 가족들에 대

1) MfAA, A 10286. 동독인민회의 대표단의 1959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의 북한 방문 보고:

우리 대표단의 영접을 위해 남함전(?)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노동당과 지역관청의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밖에 우리 동독노동자들도 역에 많이 보였다. 환영식은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거행되었다. 역 광장과 거리에는 약 3만 오천 명의 함흥주민이 우리를 환영하였고 도시전체는 동독과 북한 국기로 뒤덮여서 마치 한편의 현란한 그림 같았다. 국가 연주 후 마테른 동지가 약 3만 오천 명의 함흥주민 앞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일반적인 정치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함흥지역의 재건을 위한 동독과 북한의 단결과 우정을 찬양했고 이를 프롤레타리아적인 국제연대의 모범으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지역당위원회 위원장 동지가 환영 인사와 동독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대표단에게 명예깃발과 여러 선물이 증정되었고 대표단 환영에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대표단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환영식 후 대표단은 흥남 비료공장시찰을 위해 나섰는데 흥남 도시의 시가에는 많은 시민이 나와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했다. 흥남시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장관을 이루었고 큰 함성으로 또한 독일어로 “환영” 소리로 우리를 맞이했다. 비료공장의 책임자는 대표단을 친절하게 안내하며 공장의 설립과정과 그들이 현재의 5개년 계획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짧은 설명을 해주었다. 마이어 동지가 우리 동독인민의 인사를 전했고 대표단의 이름으로 공장의 성공과 특히 친리마 운동의 성공을 기원했다. 마테른 동지는 이 공장시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장에서는 거의 노동자들을 볼 수 없었는데 그들은 강당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 집회에서 마이어 동지는 짧은 인사말 후 선물을 받았다. 공장 시찰 후 다시 대표단은 함흥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표단을 환영했다. 함흥에서 대표단은 한 견본아파트를 시찰했는데 여기에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않았다. 마테른 동지는 시찰 후 이 아파트는 북한 친구들을 위해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고 그들 사고와 생활방식의 일대 혁신이라고 표현했다. 이어서 함흥 시내 구경을 나갔는데 대표단은 한 사찰에서 함흥 시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었다.

한 전시를 보고 대표단은 이런 개인승배아래 제 20차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합리적 결과들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대표단은 이제 막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북한에 들어갔던 것인데 베트남과 비교하여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었다.

3. 동구권외교와 북한의 정치체제

앞서 서술했듯이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북한이 경제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기간 동안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주목할 만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MfAA. A 10260). 하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정책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56년 조선노동당 내에 내분이 생긴 것이다²⁾. 이것은 소련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해 시작된 스탈린격하운동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 사회주의진영을 두고서 격렬한 이데올로기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이 두 나라와 인접해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엘리트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외부의 두 강대국의 영향아래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도부는 외교정치노선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³⁾ 1958년까지 김일성은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들을 추종자들의 도움으로 잠재우고 그의 계획을 추진해 나아갔다. 조선노동당내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들은 제거되었고 당과 국가를 초월하는 절대 권력을 부여받아 1인 독재체제를 완성시킨 것이다. 모든 반대 세력들은 숙청되어 생명을 잃었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어 졌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스탈린주의의 잔재가 청산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었고 김일성은 1958년에서 1960년 사이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북한으로 전파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였다. 그 결과는 북한의 지도부가 참가한 외국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도 나타난다(cf. MfAA. A 17509. 베를린, 14.12. 1962/63, 제 6회 SBD 전당대회의 준비 - 북한 노동당 대표단):

2) MfAA. A 17474, 1956년 9월 10일자 평양주재 동독대사 Fischer 메모: 어제 불가리아 국경일 리셉션에서 나는 평양주재 소련대사인 피메노프씨에게 그가 8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는 북도에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몇몇 토론참석자가 개인승배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을 때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람들 중의 하나는 무역부장관 윤곤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못하게 했고 그를 분열 책동자로 여겼다. 다음날 그는 더 이상 당 전당 대회에 나오지 않았고 3명의 다른 참석자와 함께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는 북한 노동조합의 의장이었다 (나머지 두 명의 이름과 자세한 직책에 대해 피메노프 동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북한 정부는 중국 정부에 도망간 사람들을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들이 정치적인 다른 이유로 핍박받는 간부들임을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거부했다. 피메노프씨는 당 전당 대회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묻는 내 질문에 더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3) Frank, 2004. p. 40: "북한은 한동안 소련과 중국 사이를 오갔지만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는 북한의 성향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며 동시에 현재 북동 아시아의 안보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안보 사이에서 북한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6.25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한 건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소련은 쿠바의 미사일 위기에서 지구력의 약점을 보였고 아마 한반도에서 있을 또 다른 갈등에서도 그러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김일성이 1955년에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극단적 민족주의적 정책을 추구하고 체제안정을 위해 경제적 번영을 희생할 것을 결정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1.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의 당 전당대회에 북한 노동당 대표의 등장과 이것이 북한에 미친 파장(구동독의 입장과 분석)

a) 불가리아에서의 북한 대표단의 등장:

김춘한 장군은 쿠바위기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제국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의 말살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동맹과 단결을 주장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주 임무는 사회주의의 방어와 공고화라고 말하며 단결, 불간섭, 평등,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칙이 무너질때 사회주의도 무너질 거라고 했다.

그는 불가리아와 북한 두 나라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하에 발전되길 원한다고 피력했다. 추측컨대 북한 대표의 이 원칙이행에 대한 주장은 사회주의 국가진영 내에서 이 원칙의 위배가 일어나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b) 소련에서의 북한 대표단의 등장:

이두연 장군은 그의 발언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역할강화를 위한 중국 인민 공화국의 중요성과 그의 큰 영향력에 대해 피력했고 몇몇 동지들의 다른 나라 전당대회에서의 중국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은 우리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해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 노동당이 다른 나라의 당 전당대회에서 중국 인민 공화국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또 그는 알바니아 지도부의 분열책동과 반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에 대해 경고했고 체코가 중국 인민 공화국에 대한 비판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의 단결이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북한 언론에는 이들 전당대회와 일정에 대한 보도기사가 나갔고 다른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물론 북한 대표단의 출발과 도착 그리고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에서의 그들의 연설 전문은 다 공표되었다. 지금 현재 북한에는 민족주의 경향 아래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하자는 주체사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사설이 많아지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형제국들과의 관계도 점점 강화하고 있다. 어떤 언론들에서도 위 전당대회들에 대한 북한 동지들의 입장을 들을 수가 없다.

2. 쿠바 분쟁에 대한 북한 노동당의 입장

북한 노동당은 미 제국주의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쿠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표명했다. 쿠바 분쟁에 대한 소련의 입장과 문제 해결방법들은 북한에서 언론들에 의해 작게 다루어졌고 이와는 반대로 중국 인민공화국의 입장표명은 전부 상세히 보도되어졌다. 이상으로 볼 때 북한이 쿠바 분쟁의 해결에 있어 소련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며 중국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수정주의노선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체코의 기록에도 나

타난다. 1960년대의 모스크바와 평양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1962년 12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회의에 참석한 북한 노동당 사절단 대표는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을 공개비판했으며 북한 언론은 동구권 국민들에게 그들의 "수정주의" 정부를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기사까지 실었다. 1967년 세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남한선수단이 참가하게 되자 북한은 외교단절론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위협했고 노동신문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자세를 "어리석다"고 낙인찍었다. 1968년 8월 21일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자마자 노동신문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자들의 개혁정책에 대한 장문의 신랄한 비판 기사를 발표했다(cf. Barinka 2004).

이러한 움직임은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1959년 평양주재 동독대사는 다음과 같은 양국 간의 무역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MfAA. A 17474, 평양, 1959.11.5):

'저의 관찰과 당시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이 종옥 의장의 도움으로 만든 1960/61년을 위한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제 보고서와 관련하여 지금 새로운 경향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의 무역은 북한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북한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우리의 경제상황과 조망들이 북한에서 공유되고 있고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김일성 동지는 모스크바 회의(1957)에서 발터 울브리히트 동지에게 이 경제적 지원활동이 단지 무역관계에만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원은 북한 물품제공에 있어 우리의 요구가 강하게 고려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북한 당국이 우리의 경제적 요구를 좀 등한시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HPA의 직원들로부터도 계속 주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당국이(제가 당신에게 미리 보고했던 것처럼) 1960년도를 완충년으로 삼아 국내경제를 다시 재정비하고 축산을 발전시키며 인민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여 더 높은 생활수준으로 가고자 함이라고 봅니다. 이에 맞게 지역산업을 장려하고 무역정책은 상대적으로 좀 후퇴하여 소련, 체코, 동독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도 좀 소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의 물자리스트를 보면 확실히 나타나는데 동독을 제외하고 위의 나라들에서 1960년의 북한 물자제공이 1959년에 비해 30%나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북한 물자제공에 있어 지금까지의 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우리도 1959년도에 비해 북한 물자제공이, 특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금, 옥수수전분, 어분, 아주까리(피마자)의 공급이 약 50%나 줄었습니다. 금의 경우, 북한 당국은 이제 더 이상 물품이 아닌 돈의 지불수단으로 보려합니다.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경우에 금을 지불수단이 아닌 전적으로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분의 경우, 1959년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2000톤을 수입했지만 1960년에는 협정상 500톤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입을 못할 것입니다. 옥수수전분의 경우, 북한이 11,000톤의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식적인 물자제공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까리(피마자)는 북한에서의 수확보

다도 더 많은 양이 물자제공협약에 포함되었는데 5000톤이 실제로는 1000톤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1960년을 위해서는 700톤이 제공될 것입니다. 총계로는 우리가 1960년을 위해 3천5백만 루블의 물자공급을 원했지만 북한 당국은 1천6백만 루블의 물자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같은 금액만큼 우리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는 북한 동지들의 행동은 우리가 상상하는 다른 사회주의 파트너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자제공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왜 물자제공협정에 있는 대로 물자들이 제공되지 않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동독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는 50년대 말까지 모스크바와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동독으로부터 되도록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내려고 노력한 듯이 보인다. 사회주의내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겪으면서 북한과 동독간의 관계는 이후 결코 50년대의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양국의 무역은 그저 물자를 교환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실제 무역 역량을 반영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한다(cf. Frank 1996).

또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독은 북한경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이는 북한체제가 발달하는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MfAA. C7023/73, C 162/75 외교정책):

- 1968.10.3: 북한 20회 경축일에 대한 동독 대사관의 평가: 평양과 다른 지방간 물가의 극심한 차이로 지방의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물품이 공급되지 못했다.

- 1968.5.22: 북한의 실상에 대한 비공식 보고: 개개인에 대한 감시 강화, 특히 동독에서 공부한 학생이나 일본에서 귀환한 사람과의 접촉을 주의해야 함.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들어온 세계문학 작품들의 압수. 대학에서는 막스-레닌주의 대가들의 원저 연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학생들에게 주입시킴. 특수 군인 양성교육은 남한에 파견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생활물자 부족으로 인한 암거래의 성행.

북한과 동독 관계에 모종의 새바람이 불어온 건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에 이어 1971년에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수상직에 취임하면서부터이다. 그는 동독이 사라지는 1989년까지 국가와 당내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합흥 프로젝트 이후 동독과 북한간의 관계는 거의 문화 및 학술 교류, 그리고 UN기구의 북한 지원에만 집중되었다. 양국은 서로의 정치적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처럼 보였으며, 이는 일반 업무를 가능케 하는 실용적 입장이었다:

- C 162/75

1968-70: 동독과 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 및 주요 과제

1970.12.17: 1971년도 동독과 북한 관계 형성을 위한 주요과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형성 강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주의 공동 협력 요망. 무역 관계 강화. 상호 정치적 원조와 협력 등

1970.11.4: 1971년도 평양 주재 동독 대사관의 경제정책 작업 계획: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작업 강화, 북한 국민 경제에서의 새로운 경제 관리체계 적용 원칙 강화/

1971-75년까지의 동독과 북한 간의 경제 및 학문기술 협력 조약에 대한 준비, 실행, 평가. 동독의 원료조달을 위한 새 경제조약 체결의 기본 노선 확정과 준비.

그 외에도 두 나라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들

1969.12.5: 1970년도 북한 주재 동독 대사관의 주요과제 (모든 면에서의 소련과의 협력 강화, 정치적 협력 강화와 두 나라의 바르샤바 조약의 공동 방어 등)

1969.4.15: 1969/70년도 동독과 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구상

1968.12.19: 동독의 동독과 북한간의 친선 협력 조약 체결 제안

1969.4.18: 동독과 북한의 상호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 기술 협력을 위한 위원회 설립을 동독에서 제의

- 경제 및 학술 협력분야

1) MfAA C 151/75

1967-69. 북한의 국민경제 발달에 관한 정보

1969.6.30. 1968년도 북한 경제 발달의 몇 가지 양상들: 경제발달 수치를 몇 년 동안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산업, 농업, 국가 세입, 무역에 관한 분야별 파악. 사회주의 산업은 여러 가지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우려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해였다. 국민들의 생필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쌀, 고기, 채소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다. 무역과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과학 기술 교류는 지난해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사실은 모든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의 선전 방향과는 확실히 모순을 보이고 있다. 경제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충분하고 오로지 정치-도덕적인 차원에서 생산 촉구(독려)만 강조되고 있다. 기술 과학 혁명은 사회 전체의 과정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과학은 생산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에는 이론과 실제적인 경제 문제에 더 많은 진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경제의 결핍 사항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

1969.2.6. 1968년도 북한 경제 발달에 관한 정보: 1968년도에 과대 예상한 산업 성장을 24%를 달성하기에는 1968년은 어려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해였다. 주요한 문제들은: 1. 군사적 상황: 미국의 첩보선 “프에블로”의 나포 및 서울에서 감행된 청와대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한반도 군사 상황이 첨예화되었다. 북한은 산업 공급에 필수적인 원료들을 방위건설과 대포제조, 방공(防空)시설 등에 사용했으며, 이 일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다. 군사훈련에 젊은 노동력이 다수 동원됨으로 산업 노

동력과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2. 기후로 인한 어려움: 가뭄과 적은 비로 전기 에너지 공급에 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화학, 철강 산업과 같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 피해가 가서 1968년 전반기에는 50~60%만이 가동되었고, 예를 들어 함흥의 비료 공장은 시시로 거의 가동될 수가 없었다. 3. 코크스와 코크스용탄의 불규칙한 운송

1968.9.2: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북한 경제 발달에 관한 간단한 조망: 1966년 당사절단 회의Parteidelegiertenkonferenz에서 7년 계획(1961-67)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오늘까지도 이 계획이 북한 경제정책의 공식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과제로는: 주요 경제 분야에서 다방면의 기술개량, 모든 국민경제 분야를 현대적인 기술로 무장,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간부의 양적, 질적 향상, 문화혁명 실행/7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 총생산은 3.2배의 성장을, 산업의 평균 성장 속도는 18% 증가했다고 함. 7년 계획 연장 이유는 방위비 지출의 증가 때문이지만, 이는 부분적인 데만 해당된다. 민족주의적 경제 개념은 자폐적인 국민경제 성향에서 드러난다./ 1965, 1966년도 이후 경제 분야에서 다시 국제적 협력, 특히 소련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경제는 „경제와 방위의 평행적인 발달“이라는 구호 하에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설정은 실제로는 모든 군사 공용시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의 공식 조사에 따르면 1967년에는 예산안의 30.2%가, 1968년에는 30.9%가 방위 목적으로 쓰여졌다./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 발달은 관료적인 작업 방식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김일성은 이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 그가 직접 개발한 방법인 „획일화와 정밀화Unifizierung und Präzisierung“를 계획 수립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평양 주재 동독) 대사관에서는 아직까지 이 방법의 본질에 대한 북한측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체 노력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차적으로는 이제까지 북한에 약 60여 개의 산업시설을 건설한 소련의 사심 없는 도움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커다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은 확실시 되어야 한다./ 이어서 산업, 농업(수치와 함께), 생필품 공급 상황, 1968년도 국민경제 계획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1967.8.11: 북한 중공업의 우세한 발달과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 발달에 대한 북한 노동당 신문 기사에 대한 동독 대사관의 몇 가지 논평: 전후 북한이 산업 분야에서 현저한 발달을 이룬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독자적인 노선의 성공이라고 강조하는 점에서는 국제적인 사회주의 국가간의 협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우려된다.

4.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차이

냉전시대 사회주의진영에서 초기의 사회주의 연대적 형제우의에 입각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동독은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60년대 이후 관계가 힘들게 되었다. 양국이 최절정기의 외교적 관계를 누린 때는 오토 그로테볼(Otto Grotewohl)이 1955년 말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이 1956년 동베를린을 공식방문 했을 때였다. 1954년에 비상업적인 원조계획에 대한 최초의 동독의 원조계획이 조인되었고 1955년 기술/경제분야에서 추가적인 지원과제에 대한 조인이 이루어 졌다. 사실 1954년과 55년에 이루어진 평양에 대한 동독의 지원은 구소련과 중국에 이은 3번째 원조국이었던 것이다(약 550 Mio. Rubel).

60년대와 70년대에 북한과 동독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난 것은 양측에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서로 상이한 태도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국 사이에 생겨난 이데올로기적 갈등에서 소련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서독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1956/57년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 총서기인 Walter Ulbricht와 Otto Grotowohl 총리는 국가연합(Konföderation)이라는 방안을 통일독일의 모델로 제시하며 선전하였는데 이는 양 국가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차이점을 유지하면서 국가연합을 이루는 것을 가리켰다. 북한의 김일성은 1960년 8월에 분단된 한반도의 양쪽의 정치적, 경제적 연결을 수용하는 상응하는 국가연합을 형성할 것을 서울에 제안하였다. 동독에서는 60년대 후반부에 이 국가연합 안이 거의 더 이상 주장되지 않았던 반면 북한은 이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수했다. 또한 차후에 동서독에서는 ‘동서독의 공존(Koexistenz)’이라는 현실에 대해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반면, 북한은 남한에서의 민주적 혁명에 의한 통일, 더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무장폭력까지도 수반하는 통일이라는 목적에 매달렸다고 볼 수 있다.⁴⁾

1977년 12월 에리히 호네커가 평양을 방문하고 비로소 양측의 관계는 50년대의 긍정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 있었고 1984년 김일성이 동베를린을 방문하여 북한과 동독은 우호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양국의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고려하여 평양방문시 호네커는 어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화적 공존은 계급투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계급투쟁의 한 형태다. (동독 대외정책 자료집 25-1권, 1977년 베를린, 동독 국립출판사 1982, 233쪽, Frank 2004에서 재인용)

이후 곧 동독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북한과 동독사이에서는 학생들과 학자들의 교환도 양측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 Vgl. Köllner, Patrick „Die deutsch-koreanischen Beziehungen von 1945 bis zur Gegenwart“, in Deutsche Schulen in Korea 1898-1998. Die deutsch-koreanischen Beziehungen im Überblick, 1998, S.114f.

북한과 동독과의 관계를 볼 때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주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 주장하는 김일성주의는 그가 내세운 이유 외에도 이처럼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성상환 (2008).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 I. 구 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과제보고서.

Barinka, Jaroslav (2004). Tasks for the study of materials for the history of Czech-Korean relation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History of Koreans in Europ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d.), Compiled by Sang-Hwan Seong, Bonn, 2004.

Frank, Rüdiger (2004), The Relations between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History of Koreans in Europ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d.), Compiled by Sang-Hwan Seong, Bonn, 2004.

Frank, Rüdiger (1996) Die DDR und Nordkorea. Der Wiederaufbau der Stadt Hamhung 1954-1962, Aachen, 1996.

Köllner, Patrick (1998) “Die deutsch-koreanischen Beziehungen von 1945 bis zur Gegenwart”, in *Deutsche Schulen in Korea 1898-1998*. Die deutsch-koreanischen Beziehungen im Überblick.

Maretzki, Hans (1991), Kim-ismus in Nordkorea: Analyse des letzten DDR-Botschafters in Pjöngjang. Stuttgart: Anita Tykve Verlag, 1991.

Seong, Sang Hwan. (2005). An Archive-based Analysis of the East-Berlin Affair (June 1967 to 1970)-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West Germany, *The S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4:1-19.

Seong, Sang Hwan (ed.) (2004). *Korean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History of Koreans in Europ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History of Koreans in Europe, University of Bonn, Bonn, Germany.

독일외무성 정치문서고내 구 동독외무성외교사료: MfAA(구 동독외무성: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북한 이미지와 대북태도: 사회심리적 척도개발과 분석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통일평화연구소장)

이상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 왜 이미지인가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남북관계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는 한국사회 특유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다. 이 쟁점은 학자들의 논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든 공적 논쟁의 핵심에 자리하는 것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 결과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심성구조 속에 강고한 정서로 뿌리내려 있어서 일상적인 대화나 시민들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늘 관심과 긴장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만큼 북한문제, 남북문제는 한국사회의 각종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균열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과연 북한과 관련한 한국사회 내부의 논란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흔히 언급하듯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립,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견해차가 그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족한 것인가? 합리적 판단과 소통에 필요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애매한 탓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상황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체제대립으로 판단하는 지적 아비투스도 지금도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탓인가, 또는 한국사회 내에 합리적 의사소통능력이 약하거나 소통의 제도화가 미약한 탓으로 이해해야 할까? 이 연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일상적 접촉이 어렵고 상호접촉이나 정보획득의 기회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대상이면서도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에게는 매우 불편한 대상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스스로가 지닌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과 정보에 바탕을 둔 종합적 관점, 즉 '주관적 지식으로서의 이미지'이다. 어떤 형태로든 획득하게 된 일정한 시선과 관점을 고정된 이미지로 구성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나름대로 적절히 해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이고 복잡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대응력을 높인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 고정관념이 한국사회 내부의 북한관련 논란과 정책적 대응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려는 것이다. 고정관념이나 이미지가 차지하는 독립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된다면, 갈등의 수준을 낮추거나 소통을 향한 새로운 대응방식을 모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이 연구는 한국인의 대북태도나 정책지향, 그로 인한 남남갈등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미지의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남남갈등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행동변수로서의 이미지

사람은 진실(truth) 혹은 사실(fact)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합리주의자 및 계몽주의자들의 신념은 현실 사회에서는 종종 검증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실 또는 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유가 가장 클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혹은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물론 객관적 사실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상황이나 객관적 현실을 행위자의 주관적 시선으로 재가공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개입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학자들은 주관적인 요소가 다분한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가 실제 환경의 구조화와 행동방식에 주요한 변수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위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 또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으면서도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에토스나 아비투스 등의 영향력이 강조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공리적인 계산성, 객관적인 정보만으로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불완전함은 분명하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분명해 질 수 있다. 일찍이 라인홀드 니부어는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집단은 도덕적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정치 및 사회적 맥락에서의 정의를 개인 차원과는 별개로 고찰하였다.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국제정치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가 미치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이 주관적인 지식(subjective knowledge)을 “이미지(image)”라고 정의하였는데(1956, 5~6), 그에 “세계가 정말로 어떤 지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 지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Boulding 1959, 120).” 후에 정치심리학자들은 볼딩의 이 이미지 개념을 정교화 시켜 “이미지 이론”을 개발하여 냉전 시대 미소 관계 등에 적용하였다. 20세기 세계정치의 주요한 부분을 점했던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적 상호작용은 상당부분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좌우되었고 실질적인 사실이나 객관적 현상이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지적들이 적지 않았다.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국가들 간의 정치적 갈등 역시 냉정하게 계산된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 누적된 이미지나 집합적 정서의 반영인 경우들이 많았다.

2) 정체성과 이미지: 탈냉전, 민주화, 다원화의 효과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역사적 변화를 겪고 있다. 탈냉전, 경제성장, 민주화, 다원화, 정보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전환이 한국사회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는 자아 및 타자에 대한 이미지의 거대한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오랫동안 가난한 약소국으로 생각되던 한국사회에 대한 스스로의 이미지가 중진국 내지 선진국으로 달라지게 된 것은 불과 십여년 내의 일이다. 국제적 이미지의 변화도 이에 못지 않았다.

이런 전반적 전환은 한국사회의 오래된 이미지에 큰 전환과 균열, 긴장을 초래하고 변화한 상황에 맞추어 이미지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정보화, 다양화, 민주화의 현실 속에서 이전까지 고수해오던 자신 및 타자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가 충분히 수정되지 못하여 갈등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세대갈등이든 정보격차가든 문화충돌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여러 현상들이 모두 이런 이미지 전환과 무

관하지 않다. 민주화와 다원화가 가져오는 이미지 전환효과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고정된 이미지, 스테레오타입의 규정력에서 벗어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주목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문제, 남남갈등 그리고 이미지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대한 것이 바로 북한과 관련한 이미지 문제다. 북한은 분단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 구성원에게는 명확한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 대상이었다. 북한에 대한 일차적 이미지는 곧 군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적(enemy)이었다. 이런 적 이미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는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들 역시 교육이나 군대의 경험을 통해 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사회화하고 있다. 또 정치적, 이념적으로도 북한의 적대성은 헌법과 법률체계 속에서 작동하고 간간히 생기는 남북간의 충돌과 격렬한 대립이 이런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하지만 탈냉전, 민주화, 경제성장 및 정보화 등의 효과로 이런 이미지가 크게 동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은 7.7 선언을 통해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선언을 했다. 1990년대 이후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상호불가침과 화해’를 약속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정치적 환경의 전환과 사람들의 의식 사이에 적지 않은 편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이런 격차를 최대로 심화시켰고 동시에 이전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화하고 유연화했다. 일부에게 이런 변화는 탈냉전에 맞추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적절한 이미지 재구성과정으로 받아들여진데 반해 일부에게 이것은 적대적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와해시키는 잘못된 이미지 효과로 간주되었다.

이런 결과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북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들이 혼재하게 되었다. 북한은 적대국이면서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일부이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별개 국가와도 같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성격과 결부된 다중적 이미지는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지향으로 나타나 남남갈등 및 정치적 균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평가의 형태 또는 객관적 정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갈등도 실제로는 그 바탕에 고정된 이미지 효과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긴장은 흔히 남남갈등으로 일컬어지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많은 사람들이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남남갈등은 반드시 정치적 진보와 보수, 또는 이념적 좌파와 우파 사이의 긴장만은 아니다. 분석적으로 보면 남남갈등은 한국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와 새로이 나타나는 정보,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미지의 재구성이 불러오는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이해가능하다. 정사회심리학적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인들은 북한과 관련하여 일종의 ‘분열증적 양가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 대해 적대감과 애뜻함, 거부감과 동포애를 함께 느끼는 애증의 공존,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II. 이미지와 관련된 이론들

1) 스테레오타입, 집합적 편견 이론

개인간 및 집단간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사회심리학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행위의 바탕에는 일정한 고정적 이미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음을 주목하였다. 개인간의 관계보다도 이질적 집단간의 관계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회학자 및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었다. 특히 인종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이런 고정관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주목되면서 이것이 사회문화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주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나아가 종교, 특정지역, 특정직업군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고 이런 고정관념이 실재할 뿐 아니라 그 집단과의 관계, 인식, 태도를 규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이들 연구는 보여주었다.

2) 정체성 이론과 구성주의

사회학자 G.H.Mead와 C.H.Cooley는 자아와 타자 개념이 쌍생아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주목한 사람들이다. 쿨리는 자아의 개념 자체가 이미지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했다. 그의 '영상자아 (looking-glass self)' 개념은 개인의 주체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친밀한 일차집단 내지 준거집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미지에 기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미드는 쿨리의 논지를 더욱 발전시켜 '주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 개념을 구분하였고 그러한 타자개념의 발전이 사회를 가능케 하고 자아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이론화했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정체성의 중요성이 구성주의로 적극 수용되었다. William Bloom (1990)¹⁾은 정체성에 대한 사회학 이론을 국제정치이론에 접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이론의 유용한 자원으로 Mead, Freud, Erickson, Parsons, Habermas 등을 꼽았다. 이들 사회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정체성이 독특한 경험과 정서, 내면적 동기구조와 연관되어 형성되며 그것은 공리주의적인 합리성 모델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요소임을 강조했다. Bloom에 따르면 대중의 행위이론과 사회심리학적 분석수준을 중시하는 정체성 이론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의 대립적 경향들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그 질문이란 첫째, 인간은 사회체계 분석의 주체인가 객체인가, 둘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야만적인가 아니면 협조적인가, 그리고 셋째 인간사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제도화되는가 아니면 훨씬 더 복잡적이고 다양한가이다. Bloom은 정체성 이론을 통해 기존의 지적 대립구도, 다시 말해 역사주의자와 행태이론가,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 그리고 국가중심적 분석과 구조주의적 분석의 대립을 넘어서는 이론적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1) William Bloom, *Person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Press, 1990.

3) 국제정치학의 이미지 연구

볼딩은 국제정치 영역에 이미지 변수를 적극 도입하고자 했다. 그는 한 주체의 행위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식(subjective knowledge), 즉 특정 사물에 대한 이미지에 의존한다고 본다(Boulding 1956, 5-6). 이 주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이미지는 과거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고 구성되지만, 결코 고정적이거나 항구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볼딩은 오히려 이미지와 사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미지가 사회를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도 계속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Boulding 1956, 64).” 사회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시킨다. 의례나 각종 기구를 통해 제도화한 이미지는 상당한 안정성과 함께 복잡한 사회구조나 현상들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개념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허먼은 볼딩의 이미지 이론을 인지심리학 개념인 스키마(schema)와 접목시켜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Herrmann 1985; 1986). 허먼에 의해 재정의된 국가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해 구조화된 인지의 모음이다 (Herrmann and FischerKeller 1995). 허먼 (1985)은 또한 국제관계에서의 “이미지(image)”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미지를 갖는 이유는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이미지를 통해 정당화시킴으로써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허먼은 타국에 대한 이미지는 양국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구조적 관계인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허먼에 따르면 그 세 가지 차원은 (1) 양립가능성 (goal compatibility), (2) 상대적 국력 (relative power), 그리고 (3) 문화적 지위이다 (Herrmann and FischerKeller 1995, 425-427).

4) 북한연구와 이미지

냉전적 체제대립 하에서의 북한인식이 90년대 이후 변화하면서 고정관념의 허약함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이미지 개념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종석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효과’(mirror image effect)라는 두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는데 거울영상효과는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로 정의된다.(이종석 34) 박명림은 ‘대쌍관계동학’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남북간에 상호작용하는 동적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남북한이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됨으로써 양자의 밀접한 내적 동학이 작동했다고 보았다. 김성보의 역사학 연구에서도 남북한이 각기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이데올로기 효과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또 남북한을 각각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하여 일대일 체제대립의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과 남한이 각기 상이한 이미지의 주체로 설정됨과 동시에 그 이미지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점에 주목한 나머지 이미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그 배후에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경도된 특징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한국사회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더 강조되는 편향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 내부의 여러 이미지들을 분석적으로 다루기보다 평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오랜 냉전적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초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학문적으

로 이미지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크지 못한 한 요인이 되었다.

인류학자 Grinker는 남북관계에 이미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일과 관련한 담론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구조주의적이면서 심리적인 분석이라고 간주하는데 남북관계가 독특한 ‘자아/타자’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인의 통일담론이 이성적인 논리라기보다 상상과 이상, 환상이 뒤섞여있는 유토피아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상실감에 대한 충분한 애도가 불가능한 상태를 봉쇄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담론 속에 사실은 매우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는데 따라서 한국인들이 ‘민족’이나 ‘통일’을 이야기하는 정서적 바탕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들, 상실감이나 애도, 증오, 또는 불쾌감이나 두려움 같은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이런 요소들의 복합체로서의 ‘한’이 한국인의 통일담론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서 이런 내면적인 정서가 상징적인 형태도 재현되는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타자’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²⁾

III. “북한이미지” 의 개념과 유형

이미지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지만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이미지는 객관적 통계나 제도적인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미지의 내용이나 강도, 특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북한의 이미지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같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남한에 존재하는 이미지는 다른 어떤 국가의 이미지와도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남북관계에서의 북한 이미지는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이미지’의 일종이면서도 그렇게 규정하기에 근본적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이미지다. 현재 남북관계는 세가지 모순적인 속성을 함께 지닌 독특한 관계로 북한은 서로 다른 세가지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간주된다³⁾. 한마디로 북한과 관련한 서로 다른 이미지가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복잡성은 분단 이래 남북관계가 구성된 제도적 맥락을 이해할 때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모순적 이미지의 공존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한 주체에게 상이한 이미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사회 내에 상이한 이미지를 고수하는 복수의 하위주체들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자가 특정 주체 내부의 인지부조화나 분열증적 사고, 또는 다중정체성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후자는 전체 사회 내부에 상이한 이미지를 고수하는 하위주체들의 대립적 공존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현실적으로는 양면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념형적으로 존재가능한 이미지의 유형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국가이미지 (national image) 개념을 원용하여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일단 ‘북한이미지’(North Korea Image)로 개념화하고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이념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표 1>에서 허먼의 세 가지 구조적 관계인식의 차원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국가 이미지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여기서 허먼이 활용한 세 차원은 각각 힘의 우열, 문화적 우열, 공존가능성 등이었고 이 세 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3X3 표를 만들면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자주 이용되는 이미지는 여섯 가지 정도인데 적국, 야만국, 제국, 쇠퇴국, 동맹국, 종속국이 그것이다. 일단 허먼

2) Roy Richard Grinker, *Korea and Its Futures*, St.Martin Press, 1998.

3)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이 말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구조적 관계인식 - 양립가능성, 상대적 국력, 문화적 지위 - 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차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는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서로를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런 속성은 일반적인 국가관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조건이다. 남북한이 각기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최고목표도 통일이지만 실제 주민들의 의식 속에도 통일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요소다4).

이상의 이미지 유형은 무엇보다도 이념형적 구성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미지의 유형으로 남북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척도로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들 유형은 서로간에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유형들은 중첩이 불가능하지만, 어떤 이미지는 서로 일정한 부분 겹칠 수 있다. 실제의 북한 이미지는 아마도 이들 여섯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되 조금씩 혼합되는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여섯 유형을 다시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검토한 각각의 이미지 유형은 매일 매일의 정보나 상황변동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 상대적 고정성을 갖는다. 그것이 이미지인 까닭에 객관적 사실이나 합리적인 계산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할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지부조화를 회피하는 메카니즘이 되기도 하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동원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독립변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이미지 유형과 북한에 대한 정서적 태도 및 평가, 그리고 특정한 정책에 대한 선호 간에는 높은 친화력이 예상된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정보나 사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이 달라지며 이는 정책적 선호나 정치적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표는 이념형적으로 구성된 북한이미지 유형과 특정한 감정적 태도, 그리고 정책선호의 관련성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일단 이념형적 차원에서 추론된 이런 연관성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 결과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표 1> 북한이미지와 감정 및 정책선호의 상관성

구조적 관계인식				이미지	감정	정책선호
양립 가능성	상대적 국력	문화적 지위	민족 동질감			
갈등	북=남	북=남	no	적대국	분노, 적대감	공격, 봉쇄
갈등/협력	북<남	북<남	no	종속국	멸시, 경멸	지원, 착취, 이용,
갈등	북>남	북<남	no	야만국	공포, 불안	자기방어, 저항
협력	북=남	북=남	yes	형제국	신뢰, 존경	공조, 협조
협력/갈등	북<남	북<남	yes	독재국	경멸, 이중성, 도움	흡수, 체제전환
협력	북<남	북=남	yes	동포	동정, 이해	보호, 지원, 양보

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2010년에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1200명의 응답자 중 남북통일이 매우,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59%였다. 비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0년 이후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들은 남한과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IV. 조사방법과 데이터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의식과 이론적 논의, 개념적 구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남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 각 이미지는 이미지 이론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구조적 관계인식의 차원들과의 연관성을 띄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감정은 또 각기 어느 이미지에 결부되는지, 이미지와 대북정책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를 위해 사용된 조사방법을 개괄하고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국가 이미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이미 8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정량적 연구는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 정부 및 외교정책 결정자의 이미지를 추적하는 연구였다. 실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한 국가의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본격적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이미지를 연구한 사례는 본 연구가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할 수 있다(Bilali 2010, 276).

이 조사를 위해 우선 북한에 대한 구조적 관계인식, 북한의 국가 이미지, 북한에 대한 감정, 대북 정책에 대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실제 조사에 앞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과정을 거쳤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설문문항을 조정한 후 전국 단위의 본 조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연구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10년 6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서울 시내 3개 대학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지에 답하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렸다. 총 249명이 예비조사에 참가하였고, 이 중 남학생은 53.4%, 여학생은 46.2%였다. 예비조사의 설문지는 크게 다섯 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첫 번째 부문에서는 북한의 국력 및 문화적 지위, 남한과의 양립가능성, 그리고 민족적 동질감을 묻는 구조적 관계인식 변수를 물었다. 두 번째로는 적국, 종속국, 야만국, 동맹국, 불법 집단, 동포의 여섯 가지 이미지를 측정하는 설문이 배정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여러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문에서는 인구학적 통제 변수 및 기타 질문들이 배정되었다.

2. 본조사

예비조사 과정에서 설문지 문항들을 일차적으로 점검한 후,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조사는 201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이 한국 갤럽이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모집단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다단계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82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대 1 개별 면접조사 방식이 이용되었다. 예비조사에서 점검과정을 거쳐 몇몇 설문 문항의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보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51.5%, 여성이 48.5% 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1%, 30대가 24.3%, 40대와 50세 이상이 각각 25.3%와 28.3%를 차지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29.5%였고,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29.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머지 41.3%는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답했다.

3. 변수 구성

(1) 구조적 관계인식 변수 북한과 남한의 상대적 국력, 문화적 지위, 양립가능성 및 민족적 동질감이라는 구조적 관계인식의 네 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의 첫 번째 섹션에서 모두 열한개의 문항이 이용되었다. 지면 관계상 몇 가지의 예만 들어보면,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였고, 이 항목은 5점 척도 (1=“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강하다.”; 5=“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훨씬 약하다.”)로 측정되었다. 또 민족적 동질감을 묻는 질문으로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이 사용되었으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⁵⁾.

(2) 이미지 변수 적국, 종속국, 야만국, 동반국, 독재국, 동포의 모두 6개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총화척도(summated scale)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였다. 적국 및 종속국, 야만국, 동반국 이미지 측정을 위해서는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문장을 고쳐 사용하였다 (Alexander et al 2005; Bilali 2010). 이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독재국 이미지와 동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검증을 거쳐 본조사에 포함시켰다. 본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국가 이미지 척도는 부록1에 수록되어 있다.

모든 변수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적국 이미지 척도에는 5개의 변수가, 동반국과 동포 이미지 척도에는 6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나머지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에는 7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종속국 척도의 변수 하나는 낮은 상관관계로 인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어 6개의 변수로 측정해야 했다.

(3) 감정 변수 북한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스물 다섯 가지의 감정을 나열하고, 각 감정을 북한에 대해 얼마나 느끼는 지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⁶⁾. 이 측정 결과를 요인분석한 결과 모두 네 가지의 요인이 검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그 내용에 따라 혐오, 공포, 친근함, 존경으로 분류하였다⁷⁾. ‘혐오’에 포함된 감정으로는 혐오, 경멸, 적대, 격분, 미움, 분노 등 여섯 가지였으며 이들 변수들의 크론바 α 값은 0.89로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공포’에는 위협, 불안감, 두려움이 포함되었고 이 세 변수의 신뢰도 계수인 α 값은 0.80이었다. 세 번째 요인인 ‘친근함’에는 동포애, 친근함, 애정, 불쌍함, 동정, 흥미로움의 여섯 변수가 포함되었고, 역시 크론바 α 값은 0.74였다. 마지막으로 ‘존경’ 요인에는 존화함, 부러움, 경외감, 존경, 신뢰의 다섯 감정이 포함되었고, 크론바 α 값

5) 이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한 것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에서 동일한 설문을 4점 척도로 2007년부터 측정해오고 있기 때문에 두 설문 조사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6) 이 항목에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은 oo 님이 북한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북한에 대해 다음 각 감정들을 느끼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7)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회전을 하였다.

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하나의 척도로 기능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인 0.69로 측정되었다⁸⁾.

(4) 정책 변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역시 총화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스물아홉가지의 대북정책에 관련된 문장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요인분석한 결과 ‘공격과 봉쇄($\alpha=0.85$)’, ‘지원과 화해($\alpha=0.81$)’, ‘착취와 이용($\alpha=0.77$)’, ‘흡수 및 체제전환($\alpha=0.81$)’, ‘협력과 공조($\alpha=0.79$)’,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와 저항($\alpha=0.79$)’이라는 여섯 개의 큰 범주로 대북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각 척도에 포함된 변수의 목록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여섯 개의 정책 척도 모두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VI. 연구결과 - 북한이미지의 유형별 분포

1. 전반적 검토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것이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나 태도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북한이미지의 성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래 <표 2>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사된 여섯 가지 이미지 척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비교하고 있다. 각 척도는 다섯 개에서 일곱 개까지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래 표의 가장 오른쪽 열에서는 각 이미지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척도에 포함된 변수의 수로 나누어 표준화시킨 값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표준화하였을 때 이론적으로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7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평균값이 클수록 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북한의 국가 이미지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화된 평균값
적대국	5	36	25.78(6.65)**	5.16(1.33)
야만국	7	49	35.38(8.92)	5.05(1.27)
종속국	9	42	29.34(5.58)	4.19(0.80)
동반국	6	42	20.81(6.38)	3.47(1.06)
독재국	12	49	36.36(6.68)	5.19(0.95)
동포형제	6	42	23.79(6.35)	3.96(1.05)

**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이렇게 표준화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북한의 국가 이미지는 독재국 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국 이미지와 야만국 이미지도 독재국 이미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평균값이 측정되었다. 반대로 가장 평균값이 낮은 이미지는 동반국 이미지로, 그 표준화된 평균값 3.47는 중간값인 4보다도 낮았다. 이는 동반국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상 대부분의

8) 감정 변수 중에는 ‘고마움’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척도 구성에서는 제외되었다.

응답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반면 종속국 이미지는 평균 4.19로 중간값을 약간 넘는 정도였고, 동포 이미지의 경우는 중간값과 거의 비슷한 3.96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수준에서 각 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한 위 <표 3>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비교된 여섯 가지 이미지 중 국민들에게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가 주로 부정적인 범주, 즉 독재국, 적대국, 야만국 이미지라는 것이다.

<표 3> 이미지별 회귀분석

	독립변수	적국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동반국	동포
구조적 관계 인식	남북한양립가능성	-0.577 ^{***} (0.093)	-0.623 ^{***} (0.126)	-0.011 ^{**} (0.098)	-0.24 (0.105)	0.308 ^{***} (0.104)	0.24 ^{**} (0.107)
	남북한군사력	-0.354 ^{**} (0.142)	-0.265 (0.194)	0.141 (0.151)	0.124 (0.161)	-0.168 (0.16)	-0.094 (0.164)
	남북한문화수준	0.38 [*] (0.229)	1.165 ^{***} (0.312)	0.722 ^{***} (0.243)	1.171 ^{***} (0.259)	-0.595 ^{**} (0.258)	-0.681 ^{***} (0.265)
	통일의 필요성	-0.213 (0.207)	-0.153 (0.281)	-0.192 (0.219)	0.13 (0.234)	0.084 (0.233)	-0.421 [*] (0.239)
감정 변수	협오	0.052 ^{***} (0.018)	0.114 ^{***} (0.024)	0.018 (0.019)	0.062 ^{***} (0.02)	-0.086 ^{***} (0.02)	-0.005 (0.02)
	공포	0.111 ^{***} (0.033)	0.134 ^{***} (0.045)	0.039 (0.035)	0.048 (0.037)	-0.019 (0.037)	-0.093 ^{**} (0.038)
	친근함	-0.019 (0.02)	-0.036 (0.028)	0.046 ^{**} (0.022)	0.03 (0.023)	-0.002 (0.023)	0.002 (0.023)
	존경	-0.131 ^{***} (0.034)	-0.149 ^{***} (0.046)	-0.073 ^{**} (0.036)	-0.191 ^{***} (0.038)	0.251 ^{***} (0.038)	0.147 ^{***} (0.039)
정책 변수	공격과봉쇄	0.117 ^{***} (0.021)	0.161 ^{***} (0.029)	0.024 (0.023)	0.119 ^{***} (0.024)	-0.051 ^{**} (0.024)	-0.011 (0.025)
	지원과화해	-0.168 ^{***} (0.042)	-0.103 [*] (0.057)	0.083 [*] (0.044)	-0.047 (0.047)	0.239 ^{***} (0.047)	0.33 ^{***} (0.048)
	착취와이용	-0.012 (0.04)	0.006 (0.054)	0.152 ^{***} (0.043)	-0.009 (0.045)	0.098 ^{**} (0.045)	0.135 ^{***} (0.046)
	흡수와체제변환	0.117 ^{***} (0.038)	0.059 (0.052)	-0.003 (0.041)	0.168 ^{***} (0.043)	-0.014 (0.043)	-0.107 ^{**} (0.044)
	협력과 공조	0.029 (0.036)	-0.023 (0.048)	0.062 [*] (0.038)	0.06 (0.04)	-0.061 (0.04)	-0.009 (0.041)
	방어와저항	0.292 ^{***} (0.053)	0.437 ^{***} (0.072)	0.04 (0.056)	0.259 ^{***} (0.059)	-0.141 ^{**} (0.059)	-0.151 ^{**} (0.061)
사회 경제적 통제 변수	대통령직무평가	0.281 (0.176)	0.4 [*] (0.239)	0.091 (0.186)	0.461 ^{**} (0.199)	-0.033 (0.198)	0.256 (0.203)
	정치이념	-0.034 (0.196)	-0.071 (0.267)	-0.406 [*] (0.209)	0.133 (0.222)	-0.263 (0.221)	-0.284 (0.227)
	교육수준	-0.17 (0.256)	0.4 (0.348)	-0.276 (0.272)	-0.193 (0.29)	-0.6 ^{**} (0.288)	-0.336 (0.296)
	연령	0.513 ^{***} (0.188)	1.007 ^{***} (0.256)	0.641 ^{***} (0.2)	0.061 (0.213)	-0.289 (0.212)	0.166 (0.218)
	상수	19.441 ^{***} (2.161)	17.963 ^{***} (2.941)	16.744 ^{***} (2.295)	18.477 ^{***} (2.445)	24.763 ^{***} (2.433)	23.434 ^{***} (2.496)
	N	822	822	822	822	822	822
	R2	0.471	0.455	0.151	0.329	0.272	0.227
	adjusted R2	0.459	0.443	0.132	0.314	0.255	0.209
	F	39.788	37.3	7.956	21.922	16.669	13.088

*. $p < 0.1$ **. $p < 0.05$ ***. $p < 0.01$

<표 3>은 각 이미지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구조적 관계인식, 감정, 대북정책, 사회경제적 통제변인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감정, 정책변수, 사회경제적 통제변수의 내용과 구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⁹⁾. 독립변수 중 남북한 양립가능성 변수는 “남북한 협력 가능성”, “남북한 갈등 불가피성”, 그리고 “남북한 경제 협력 가능성”의 세가지 변수를 합친 것이다.

한편, 남북한군사력 변수는 5점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질문 문항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 변수의 숫자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약한 것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남북한문화수준 변수도 5점척도 변수였으며, “북한이 문화적으로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다.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북한의 문화가 남한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구조적 관계인식 변수인 통일의 필요성은 4점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이 회귀분석 결과를 각 이미지 별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통제변인으로 삽입된 사회경제적 변수를 제외한 구조적 관계인식, 감정, 정책 변수들이 각각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1) 적국이미지

구조적 관계인식

구조적 관계인식 변수와 적국 이미지의 관계는 이 연구의 이론 부분에서 상정한 것과 비교적 잘 맞아 떨어지는 편이다. 남북한 양립가능성과 적국이미지는 역방향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즉, 남북한 양립가능성을 덜 믿는 사람일수록 적국이미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또 남북한군사력의 경우에도,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북한을 적으로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이 적국 이미지에 딱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반면, 남북한 문화수준 변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문화수준이 열등하다고 믿을수록 적국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변수

네가지 감정변수 중에서 친근함을 제외한 나머지 혐오, 공포, 존경이 모두 북한의 적국이미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북한을 혐오할수록,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공포감을 느낄수록 북한을 적국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면 북한에 대한 존경의 감정은 적국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변수

적국이미지에 정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북정책 변수는 공격과 봉쇄, 흡수와 체제변환, 방어와 저항이었다. 즉 이 세가지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해 선호가 높은 사람들은 북한을 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원과 화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과 남북간 화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적국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낮았다.

9) 단, 회귀분석에는 표준화된 감정변수나 정책변수, 혹은 이미지 변수대신 비표준화 상태의 원 점수를 사용하였다.

(2) 야만국 이미지

구조적 관계인식

야만국 이미지는 적국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양립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일수록 야만국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북한이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야만국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았다. 북한의 문화수준은 이 야만국 이미지와 독재국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력이나 통일의 필요성 등은 이 이미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감정변수

적국이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혐오와 공포감이 클수록 야만국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아졌다. 반면 존경의 이미지는 야만국 이미지와 역관계에 있었다. 즉, 북한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 낮을수록 야만국 이미지의 확률이 높아진다.

정책변수

여섯 가지 정책변수중 야만국 이미지와 정방향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정책변수는 공격과 봉쇄 및 방어와 저항 두가지였다. 특히 방어와 저항 변수는 야만국 이외에도 적국, 독재국, 동반국, 동포 이미지 모두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이미지보다도 특히 야만국 이미지 모델에서 가장 큰 회귀계수 값이 측정되었다. 이는 방어와 저항 변수가 야만국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다른 북한 이미지들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종속국 이미지

구조적 관계인식

종속국 이미지의 경우 비록 그 정도는 미약한 편이지만 남북한 양립가능성에 회의적일수록 종속국 이미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미지 이론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문화수준을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속국 이미지를 가질 확률도 높았다. 이 문화수준 변수는 여섯가지 북한 이미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모델에서 북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감정변수

위의 적국 이미지와 야만국 이미지 모델에서 혐오와 공포가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던 것과는 달리, 종속국 이미지에는 이 두 감정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에 대한 친근함의 감정은 종속국 이미지를 강화시키며, 동시에 존경 변수는 종속국 이미지와 역방향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변수

종속국 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변수는 모두 세가지로, 지원과 화해, 착취와 이용, 그리고 협력과 공조였다. 그러나 지원과 화해의 경우 다른 북한 이미지 모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영향력의 크기는 약한 편이었다.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정책변수는 이미지 이론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착취와 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북한에 대한 타산적 접근으로서의 착취와 이용 정책에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은 북한을 보호해주어야

할 종속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4) 독재국 이미지

구조적 관계인식

이 연구에서 이론화한 독재국 이미지는 북한의 국력과 문화적 수준이 남한보다 열등하다고 느끼지만 민족 동질감 자체는 인정하는 복합적 성격의 이미지였다. 문화수준 변수에 있어서는 예상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문화수준에 대한 낮은 평가와 독재국 이미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양립가능성 혹은 군사력, 통일 필요성은 독재국 이미지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감정변수

북한을 독재국 이미지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존경의 감정은 이 독재국 이미지와 역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독재국으로서의 북한은 공포의 대상은 아니었다. 또 친근함과도 특별히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변수

독재국 북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으로 공격과 봉쇄, 흡수와 체제변환, 방어와 저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중 특히 흡수와 체제변환 변수의 영향력은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독재국 이미지 모델에서 가장 컸다. 즉, 독재국 북한은 평화로운 유화정책의 상대라기 보다는 공격해서 무너뜨리거나 체제변환을 통해 흡수해야 할 상대로 파악되고 있었다.

(5) 동반국 이미지

구조적 관계인식

동반국 이미지는 북한의 문화와 국력 수준이 비슷하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남북한 문화수준 변수와 역방향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총 823명 응답자 중 북한의 문화수준이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21명(2.5%)에 불과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문화수준 변수는 북한과 남한의 문화수준이 엇비슷하거나 북한이 훨씬 뒤떨어진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이 역방향 관계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남북한 양립가능성에 있어서도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정방향의 영향력 관계가 측정되었다. 그러나 남북한군사력 변수와 통일 필요성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았다.

감정변수

동반국으로서의 북한 이미지는 감정 측면에 있어서는 존경 변수와 정방향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북한에 대해 존경의 감정이 높은 사람은 북한을 동반자로 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동반자 이미지는 북한의 혐오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공포나 친근함은 동반국 이미지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정책변수

동반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정책으로 뚜렷하게 가장 선호된 것은 지원과 화해였다. 이와 더불어 그 강도는 약하지만 착취와 이용 정책도 동반국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반면, 동반국 이미지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방어와 저항 및 공격과 봉쇄 같은 적대적 정책이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정책 변수에 있어 한가지 특이한 점은 여러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에서 매우 높은 선호순위를 기록하였던 협력과 공조 정책이 정작 회귀분석에서는 종속국 모델을 제외하면 다른 북한 이미지들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신 햇볕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원과 화해정책은 동반국 이미지에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동포 이미지

구조적 관계인식

동포 이미지는 동반국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문화적 수준이 한국과 엇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역시 양립가능성에서도 동반국 변수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통일필요성 변수는 여섯 개 이미지 모델 중 유일하게 동포 이미지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영향력의 강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볼수록 동포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감정변수

북한에 대해 공포를 덜 느낄수록 동포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또 동반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경의 감정은 동포이미지와 정방향의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포로서의 북한에 대한 친근함이나 혹은 혐오감의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책변수

동포이미지를 가진 이들이 가장 선호한 대북정책은 지원과 화해였다. 이는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동포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반면, 착취와 이용 정책에 대한 선호도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 강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이 동포이미지 이면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접근이 숨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반면 흡수와 체제변환 및 방어와 저항 같은 적대적 대북 정책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2. 세대별, 학력별, 이념별 검토

또한 북한이미지와 감정, 정책선호 등은 세대별, 학력별, 계층별, 정치성향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 북한이미지

다음 표는 북한이미지 유형과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표 4> 북한 이미지와 사회경제적 변인간 상관관계

	정치이념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대통령직무평가
적국 (신뢰도)	.183** .000	.197** .000	-.205** .000	-.068 .051	.218** .000
야만국 (신뢰도)	.167** .000	.215** .000	-.170** .000	-.063 .072	.200** .000
종속국 (신뢰도)	-.029 .410	.199** .000	-.137** .000	-.020 .563	.035 .311
독재국 (신뢰도)	.151** .000	.140** .000	-.136** .000	-.025 .479	.196** .000
동반국 (신뢰도)	-.164** .000	-.056 .110	.004 .900	-.024 .485	-.123** .000
동포 (신뢰도)	-.149** .000	.042 .230	-.027 .434	-.001 .984	-.075* .032
**. 99% 유의수준 *. 95% 유의수준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미지와 정치이념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대변수와 교육변수도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주요한 요인별 북한이미지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세대별 이미지 차이

다음 표는 각 연령대별 이미지의 분포상황을 표준화한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군에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연령별 차이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적국 이미지나 야만국 이미지, 종속국 이미지는 연령대별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 50대 이상에서 그 강도가 확연하게 강화된다. 반면 폭정하의 동족, 형제국, 동포 이미지 등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세대변수가 주로 부정적 이미지의 강약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는 상대적으로 강한 연계가 없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5> 연령별 이미지 표준화 점수 평균값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적국	4.81 (1.32)	5.01 (1.26)	5.2 (1.35)	5.52 (1.29)
야만국	4.67 (1.24)	4.94 (1.18)	5.09 (1.32)	5.44 (1.24)
종속국	4.6 (0.96)	4.83 (0.91)	4.97 (0.9)	5.11 (0.88)
독재국	5.11 (0.96)	5.04 (0.95)	5.12 (0.9)	5.46 (0.96)
동반국	3.51 (0.99)	3.52 (1)	3.51 (1.14)	3.34 (1.09)
동포	3.8 (1.02)	4.06 (1.05)	4.02 (1.09)	3.96 (1.06)

note. 괄호안 숫자는 표준편차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로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항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는 한국사회의 부정적 북한이미지는 50대 이상 세대의 강한 이미지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교육수준별

북한이미지는 교육수준에 따라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오히려 세대변수보다도 학력변수의 영향이 더 크게 확인된다. 대학졸업자 이상의 고학력군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값이 저학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절대값은 여전히 높지만) 다음 표는 각 이미지 항목에 대한 학력별 반응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교육수준별 이미지 표준화 점수 평균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적국	5.66 (1.18)	5.32 (1.28)	4.88 (1.35)
야만국	5.5 (1.18)	5.15 (1.23)	4.85 (1.3)
종속국	5.1 (0.87)	4.98 (0.88)	4.76 (0.97)
독재국	5.54 (0.82)	5.21 (0.95)	5.09 (0.97)
동반국	3.5 (0.99)	3.45 (1.07)	3.48 (1.08)
동포	4.03 (1.01)	3.98 (1.02)	3.94 (1.11)

note. 괄호안 숫자는 표준편차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세대변수와 유사하다. 즉 적국, 야만국, 종속국, 독재국 같은 부정적 이미지군에서 학력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대간 차이보다 학력 차이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특히 부정적 이미지가

학력이 높아질수록 매우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동반국이나 동포집단 같은 긍정적 이미지는 학력이 높아진다고해도 크게 증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 변수가 부정적 이미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는 별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3) 정치이념별

한국의 북한관련 갈등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사이의 이념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은 매우 많다. 이런 주장은 일부 사실이기도 하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증폭되거나 엄밀한 개념적 성찰 없이 이루어진 논란도 포함되어 있다. 과연 북한관련 이미지나 감정, 정책선호 등에 이념적 성향은 어느 정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가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다음의 표를 보자.

<표 7> 정치 이념별 이미지 표준화 점수 평균

	진보	중도	보수
적국	4.84 (1.41)	5.18 (1.29)	5.46 (1.26)
야만국	4.77 (1.36)	5.1 (1.23)	5.31 (1.21)
종속국	4.96 (0.89)	4.86 (0.93)	4.89 (0.96)
독재국	5.03 (0.99)	5.19 (0.63)	5.39 (0.93)
동반국	3.66 (1.05)	3.98 (1.05)	3.21 (1.1)
동포	4.16 (0.99)	3.98 (1.05)	3.75 (1.1)

note. 괄호안 숫자는 표준편차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이념별로 북한이미지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적국, 야만국, 독재국과 같은 부정적 함의가 강한 이미지는 이념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수층에게 북한은 적대적이고 야만적이며 독재적인 대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고 진보층은 그런 이미지의 강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 동포이미지나 동반국 이미지가 보수층에 비해 진보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미지와 이념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진보진영이 부정적 이미지보다 동반국이나 동포 이미지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진보층 역시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 따라서 전체 응답 패턴에서는 이념별 차이보다도 유사성이 더 크게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미지를 둘러싼 이념적 차이는 보다 제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4) 정치적 성향(대통령 직무평가) 별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로 확인되는 정치적 성향이 북한이미지와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 표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잘했다고 보는 응답자와 잘못했다고 보는 응답자 간에 북한이미지 유형이 매우 크게 차이를 보인다.

<표 8>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북한이미지 표준점수 평균

	잘못했음	보통	잘했음
적국	4.87 (1.37)	5.28 (1.19)	5.69 (1.38)
야만국	4.8 (1.31)	5.16 (1.2)	5.53 (1.21)
종속국	4.88 (0.97)	4.86 (0.82)	5.01 (1.08)
독재국	5.03 (0.98)	5.22 (0.89)	5.61 (0.93)
동반국	3.59 (1)	3.43 (1.08)	3.21 (1.14)
동포	4.03 (1.02)	3.96 (1.03)	3.79 (1.24)

note. 괄호안 숫자는 표준편차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하여 적국, 야만국, 독재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또 동반국이나 동포이미지 같은 긍정적 이미지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약하다. 이 차이는 앞서 살펴본 이념적 차이보다도 더 강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앞의 이념별 검토에서 언급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상대적 차이가 꽤 크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반응과 전혀 다른 정도까지 이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대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북한이미지에 대한 지지는 부정적 이미지에 비해 낮고 그런 경향성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 이미지와 감정

각 국가 이미지는 감정 척도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아래 <표 9>에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역시나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적국, 야만국, 독재국의 부정적 이미지 그룹은 서로 비슷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부정적 이미지 그룹은 우선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가장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포감과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친근함이나 존경은 이 부정적 이미지 그룹과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표 9> 국가 이미지와 감정의 상관관계+

	혐오	공포	친근함	존경
적국	.375**	.289**	-.192**	-.190**
야만국	.419**	.301**	-.189**	-.180**
종속국	.121**	.130**	.153**	-.047
독재국	.314**	.219**	-.065	-.227**
동반국	-.259**	-.127**	.167**	.293**
동포	-.132**	-.112**	.157**	.220**

+ N=823, ** $p < 0.05$

동반국과 동포이미지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 그룹은 그 반대 양상을 보였다. 이 이미지들은 북한에 대한 존경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혐오와 공포는 역방향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반면, 여기에서도 종속국 이미지는 이 두 그룹과 구별되어지는 면모를 드러냈다. 종속국 이미지는 네 가지 감정 척도 중 어느 것보다도 그다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종속국 이미지가 북한에 대한 감정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어내려는 타산적인 태도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다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각 감정 표준점수의 기본적인 통계치는 아래표에 보고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선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표준점수의 중간값은 5.5인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넘는 감정이 없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강렬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평균값이 높은 감정은 공포였는데, 동시에 공포의 표준편차도 다른 감정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응답자마다 북한에 대해 느끼는 공포의 수준이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의 뒤를 이어 북한에 대한 감정에서 높은 평균값을 갖는 것은 친근함이었다. 흥미롭게도, 북한에 대한 혐오감의 평균값은 친근함보다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혐오와 공포감의 평균값은 약 0.25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북한에 대해 존경심은 다른 세 감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존경의 최대값은 이론적 한계치인 10점에 훨씬 못미치는 6.40으로 드러나, 사실상 북한에 대해 존경의 감정 - 온화함, 부러움, 경외감, 존경, 신뢰 등을 포함하는 -을 갖는 응답자는 극히 드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존경의 평균값도 2.12로 극히 낮은 수준이고, 표준편차 역시 1.11로 응답자들 사이의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공포, 친근함, 혐오의 세 감정의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은 공포감이었으나, 동시에 공포감에 대한 개인별 차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포감 못지 않은 높은 점수를 보인 친근함의 경우는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친근함의 수준에 있어서의 개인적 차이는 공포감이나 혐오감에 비해 작은 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표 10> 감정 표준점수 기본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협오	1.00	10.00	4.9032	2.09384
공포	1.00	10.00	5.1517	2.23248
친근함	1.00	10.00	4.9871	1.66609
존경	1.00	6.40	2.1243	1.11009

한편, 이 네 가지 감정 사이의 상호 상관관계를 보면, 일단 협오감과 공포감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에 보면 협오와 공포의 피어슨 상관관계수는 0.568 이었다. 마찬가지로 친근함과 존경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 수준은 협오 - 공포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11> 감정 표준점수간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계수)

	협오	공포	친근함	존경
협오	1			
공포	.568***	1		
친근함	-.010	.150***	1	
존경	.015	.073*	.242***	1

***. $p < 0.01$, **. $p < 0.05$

감정간 상관관계에서 흥미로운 것은 친근함과 공포 사이에 높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 존경과 공포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복합적인 북한 이미지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감정 및 기타변수들간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계수)

	세대별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정치적성향	대통령직무평가
협오	.174**	-.123***	-.017	.104***	.118***
공포	.106**	-.141***	-.040	.078**	.101***
친근함	.073*	.022	.019	-.113***	-.029
존경	.006	-.040	-.079*	-.116***	-.042

***. $p < 0.01$, **. $p < 0.05$

위 표에서는 네 가지 감정과 세대,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대통령직무평가 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혐오와 공포의 감정은 세대별, 교육수준별, 정치성향별, 대통령직무평가별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 친근함과 존경은 이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적은 편이었는데, 유일하게 정치적 성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북한에 대해 친근함이나 존경의 감정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 밖에 친근함은 세대와, 그리고 존경은 가구소득수준과 매우 약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1) 세대별 감정 차이

<표 13> 세대별 표준화 점수 평균값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혐오	4.49 (2.19)	4.68 (1.82)	4.86 (2.05)	5.5 (2.19)
공포	4.8 (2.27)	5.14 (2.11)	5.07 (2.22)	5.5 (2.29)
친근함	4.78 (1.91)	4.95 (1.5)	5.13 (1.64)	5.07 (1.6)
존경	2.11 (1.03)	2.09 (1.10)	2.23 (1.17)	2.08 (1.13)

note. 괄호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각 세대별로 느끼는 감정의 순위와 강도를 보면 흥미있는 패턴이 드러났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북한에 대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공포였다. 그러나 20대를 보면 혐오, 공포, 친근함 모두 다른 세대들에 비해 현저히 점수가 낮은 편이어서 북한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냉정한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50대 이상의 노장년층에서는 북한에 대해 혐오와 공포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긴 했지만 동시에 친근함의 감정 또한 높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다른 세대들에 비해 상당히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0대의 경우 유일하게 다른 세대와는 달리 친근함이 다른 감정보다 가장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근함의 표준편차도 낮은 편이어서 40대가 비교적 동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2) 교육수준별 감정 차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수준과 북한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왔는데, 북한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14> 교육수준별 표준화 점수 평균값

	중졸	고졸	대재이상
혐오	5.4 (2.02)	5.04 (2.04)	4.65 (2.13)
공포	5.79 (2.02)	5.31 (2.26)	4.85 (2.21)
친근함	5.12 (1.43)	4.86 (1.64)	5.07 (1.74)
존경	2.18 (1.08)	2.17 (1.18)	2.07 (1.05)

note. 괄호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우선 위 표에서 보듯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된 혐오와 공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확실하게 관찰되고 있다. 중졸 이하의 학력자(N=96) 북한에 대한 혐오 평균 점수는 5.4 였고, 공포 평균 점수는 5.79로써 중간값 5.5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졸자의 혐오 점수는 5.04(N=347), 대재 이상의 학력에서는 혐오 점수가 4.65(N=381)로 낮아졌으며 공포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즉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덜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력이나 전체 군사력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경향은 그다지 놀라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친근함과 존경의 경우는 교육수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 느끼는 감정에도 차이가 있었다. 중졸 및 고졸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감정은 공포였다. 이어서 혐오와 친근함의 순으로 북한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재 이상 학력층에서는 친근함이 가장 높았고 공포와 혐오가 순서대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점에도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저학력층일수록 북한에 대해 공포와 혐오를 느낄 가능성이 높았으며, 고학력층에서는 친근함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이미지와 대북정책

<표 15>는 북한에 대한 각 이미지가 어떠한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와 연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적국, 야만국, 독재국 이미지는 대북정책 선호에 비슷한 패턴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정적 이미지 그룹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정책은 ‘공격과 봉쇄’로, 이미지 이론에서 예측되었듯 특히 적국 이미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정책은 ‘방어와 저항’으로, 야만국 이미지와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이들 이미지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대북정책은 ‘지원과 화해’ 및 ‘협력과 공조’였다. 불법집단 이미지보다도 적국 이미지와 야만국 이미지가 이 두 대북정책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독재국 이미지는 적국이나 야만국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흡수와 체제전환’ 정책에 대해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 북한의 국가 이미지와 대북정책의 상관관계+

	공격과 봉쇄	지원과 화해	착취와 이용	흡수와 체제전환	협력과 공조	방어와 저항
적국	.502***	-.317**	.012	.292***	-.257***	.463***
야만국	.490***	-.261**	.034	.258***	-.249***	.471***
종속국	.029	.192**	.280***	.130***	.213***	.131***
독재국	.394***	-.154***	.107***	.325***	-.079**	.403***
동반국	-.290***	.340***	.121***	-.104***	.215***	-.251***
동포	-.217***	.384***	.177***	-.097***	.242***	-.194**

+ N = 823, ***, p < 0.01, **, p < 0.05

반면 긍정적 이미지 그룹에 속하는 동반국 이미지와 동포 이미지는 ‘지원과 화해’ 및 ‘협력과 공조’ 정책에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러나 ‘공격과 봉쇄’ 및 ‘방어와 저항’ 정책에는 역방향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종속국 이미지는 예측한 바와 마찬가지로 ‘착취와 이용’ 정책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6> 대북정책 표준점수 분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격과 봉쇄	1.00	7.00	3.84	1.33
흡수와 체제전환	1.00	7.00	4.05	1.32
방어와 저항	1.00	7.00	5.02	1.35
지원과 화해	1.00	7.00	4.14	1.38
협력과 공조	1.00	7.00	4.81	1.19
착취와 이용	1.00	7.00	4.74	1.13

이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이고, 각각의 대북정책 선호를 비교가능하도록 표준화시킨 대북정책 표준점수의 분포는 위의 표에 보고되어 있다. 표준 점수의 중간값은 4점이며, 위 표에서 보듯 가장 선호가 낮은 대북정책은 공격과 봉쇄(3.84)였다. 이와 더불어 흡수와 체제전환도 4.05로 중간값 보다는 약간 높지만 다른 대북정책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에 대한 적극적 공세전략들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장 선호가 높은 대북정책은 5.02의 방어와 저항이었던 반면, 협력과 공조가 4.81로 뒤를 이었고, 북한에 대한 이윤추구적, 혹은 타산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착취와 이용 또한 4.74로 상당히 높았다. 또 지원과 화해 정책은 4.1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결국 여섯가지 대북정책은 선호가 높은 정책과 낮은 정책의 두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공세전략인 공격과 봉쇄, 흡수와 체제전환에 대한 선호가 낮았고, 또 무조건적인 북한 퍼주기로 인식될 수 있는 지원과 화해 또한 선호가 낮은 편이었다. 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남쪽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협력과 공조 정책과 더불어 남북 문제를 매우 현실적이 타산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착취와 이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선호가 높았으며, 동시에 국내적 반공태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비교적 소극적 대북정책인 방어와 저항 역시 선호가 높은 대북정책의 하나로 드러났다.

<표 17> 대북정책간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계수)

	공격과 봉쇄	흡수와 체제전환	방어와 저항	지원과 화해	협력과 공조	착취와 이용
공격과 봉쇄	1					
흡수와 체제전환	.347***	1				
방어와 저항	.438***	.343***	1			
지원과 화해	-.348***	.041	-.111***	1		
협력과 공조	-.377***	.055	-.065	.585***	1	
착취와 이용	-.012	.347***	.261***	.441***	.481***	1

*** $p < 0.01$, ** $p < 0.05$

위 표는 여섯가지 대북정책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과 봉쇄, 흡수와 체제전환, 방어와 저항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인 지원과 화해 및 협력과 공조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착취와 이용 정책은 유화적 정책들인 지원과 화해 및 협력과 공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햇볕 정책 및 화해 정책의 옹호자들의 상당수는 남북관계의 호전을 통해 남한이 얻게 될 이익 때문에 이들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흡수와 체제전환 및 방어와 저항 정책의 지지자들 또한 착취와 이용을 동시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민족 감정에 기반하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수준에서 그 득실을 따지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공격과 봉쇄는 가장 인기없는 대북정책이기도 했으며, 이 정책에 대한 지지는 유일하게 착취와 이용이라는 경제적 접근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네 가지 정책 - 지원과 화해, 협력과 공조, 방어와 저항, 흡수와 체제전환 - 들이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 관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남한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인식에 공통점이 있는 반면, 공격과 봉쇄 정책의 옹호자들은 이런 타산적 접근 보다는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여섯가지 대북정책과 사회경제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18>

	세대별	교육수준별	정치이념	대통령직무평가
공격과 봉쇄	.117**	-.155***	.177***	.248***
흡수와 체제전환	.134***	-.127***	.081**	.135***
방어와 저항	.155***	-.152***	.156***	.173***
지원과 화해	.094***	.001	-.208***	-.200***
협력과 공조	.087**	.012	-.158***	-.117***
착취와 이용	.144***	-.081**	-.053	-.084**

*** $p < 0.01$ ** $p < 0.05$

분석결과를 보면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는 매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 - 공격과 봉쇄, 흡수와 체제전환, 방어와 저항 - 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반면, 정치 이념이 진보적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유화적 대북정책인 지원과 화해 및 협력과 공조에 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화적 대북정책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도 발견되었으나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유화적 정책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타산적 접근인 착취와 이용은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또 교육수준이 낮고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착취와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다른 변수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표 19>는 북한에 대한 각 이미지가 어떠한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와 연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적국, 야만국, 불법집단 이미지는 대북정책 선호에 비슷한 패턴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정적 이미지 그룹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정책은 ‘공격과 봉쇄’로, 이미지 이론에서 예측되었듯 특히 적국 이미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정책은 ‘방어와 저항’으로, 야만국 이미지와 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이들 이미지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대북정책은 ‘지원과 화해’ 및 ‘협력과 공조’였다. 불법집단 이미지보다도 적국 이미지와 야만국 이미지가 이 두 대북정책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불법집단 이미지는 적국이나 야만국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흡수와 체제전환’ 정책에 대해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북한의 국가 이미지와 대북정책의 상관관계+

	공격과 봉쇄	지원과 화해	착취와 이용	흡수와 체제전환	협력과 공조	방어와 저항
적국	.502**	-.317**	.012	.292**	-.257**	.463**
야만국	.490**	-.261**	.034	.258**	-.249**	.471**
종속국	.029	.192**	.280**	.130**	.213**	.131**
독재국	.394**	-.154**	.107**	.325**	-.079*	.403**
동반국	-.290**	.340**	.121**	-.104**	.215**	-.251**
동포	-.217**	.384**	.177**	-.097**	.242**	-.194**

+ N = 823, ** p < 0.05

반면 긍정적 이미지 그룹에 속하는 동맹국 이미지와 동포 이미지는 ‘지원과 화해’ 및 ‘협력과 공조’ 정책에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러나 ‘공격과 봉쇄’ 및 ‘방어와 저항’ 정책에는 역방향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종속국 이미지는 예측한 바와 마찬가지로 ‘착취와 이용’ 정책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VII. 결론과 함의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몇가지 결론과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함의

- 현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미지 변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
- 한국사회에서도 북한과 관련한 고정관념, 집단적 이미지가 중요한 변수
- 이미지는 단순하기보다 여러 유형이 혼재된 복합적인 것일 수 있음
- 사회심리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활용하는 개념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내부정치와 외부정책의 연관성에 이미지가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
- 이미지와 특정한 감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됨, 따라서 감정 변수도 주목해야
- 이미지와 정책선호 사이의 친화력도 확인됨
- 이미지의 상이한 유형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필요
- 정치적 논란, 남남갈등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미지 변수, 감정 요인을 고려해야
- 향후 한국사회의 자기정체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남북한의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이 북한이미지, 대북정책선호와 연결되는 방식 검토
- 북한이미지에 내재하는 인지부조화, 양가적 태도, 자기분열증적 성격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

2. 방법론적 함의

- 북한이미지를 일반적 '국가이미지'의 특수유형으로 개념화하는 것의 유용성
- 북한이미지는 크게 6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확인할 수 있는 문항척도를 개발
- 상이한 북한이미지 유형과 다른 사회정책적 태도 간의 상관관계 검토 가능
- 북한과 관련한 감정유형을 4가지로 구분 가능
- 집단적 정서, 감정, 태도, 사회심리적 지향성을 보다 엄밀한 근거와 자료로 연구해야
- 이미지와 감정의 상호연관에 대한 논의도 분석적 검토 가능
- 북한정책에 대해서도 이미지와 연관하여 여섯 유형으로 분류가능
- 여섯 유형은 구체적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미지 및 정서와도 상관
-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응, 시민적 평가에 대한 단순한 해석, 앙케이드식 조사의 한계

3. 현실적 함의

- 북한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군이 매우 강하고 긍정적 이미지군은 상대적으로 약함
- 감정유형은 불안 > 혐오 > 신뢰 > 존경의 순. 불안과 위협의 정서가 매우 강함.
- 이런 이미지, 감정이 작용하는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 이미지와 감정에선 학력, 세대, 이념, 지역, 정치적 성향 등 변수가 작용
- 전반적으로 50대 이상 세대, 고졸 이하, 보수적 이념, 여당성향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남
- 긍정적인 북한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낮으며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차이도 뚜렷하지 않음
- 상이한 이미지 유형이 혼재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과 관련한 사회적 인지부조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
- 양가적 태도,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중정서의 바탕에 작용할 수도
- 남남갈등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될 수도 있음. 단순한 보수/진보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집단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

4. 사회정치적 과제

- 이미지의 세련화 (sophistication) 가 필요: 이미지와 감정이 작용하는 힘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너무 원초적이며 감정적인 차원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 및 객관적 현실이해와 연결됨으로써 의미 있는 정서적 자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
- 사회구성원 내부에 존재하는 북한이미지의 양가성, 모순성, 부조화성을 완화시키고 서로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개념, 담론의 개발이 필요
- 앞으로 통일의 노력을 위해 국민정서, 민족정체성, 북한이미지, 개방적 개인주의, 다문화적 정체성 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심도있는 노력이 필요

<참고문헌>

- 김병연 외,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 박명규,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방법론과 함의”, [통일과 평화] 2-2, 2010.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7 통일의식조사], [2008통일의식조사], [2009] 통일의식조사
- 신옥희. 1998.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2(2):147-68.
- . 2007. "비대칭적 동맹에서의 갈등: 정치심리학적 측면."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0(1):3-31.
- 이상신. 2010. "천안함과 대외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통일의식조사 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
- 최종건. 2006.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 예측에 관한 비판적 평가: 이론중심적 사고를 중심으로." *국제평화* 3(2):316-64.
- Alexander, Michele G., Marilyn B. Brewer, and Richard K. Hermann. 1999. "Images and Affect: A Functional Analysis of Out-Group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78-93.
- Alexander, Michele G., Marilyn B. Brewer, and Robert W. Livingston. 2005. "Putting Stereotype Content in Context: Image Theory and Interethnic Stereotyp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6):781-94.
- Alexander, Michele G., Shana Levin, and P. J. Henry. 2005b.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26(1):27-45.
- Bilali, Rezarta. 2010. "Assessing the Internal Validity of Image Theory in the Context of Turkey-U.S. Relations." *Political Psychology* 9999(9999).
- Boulding, K. E. 1959.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2):120-31.
- Boulding, Kenneth Ewart. 1956.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rewer, Marilyn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3):429-44.
- Burn, Shawn M., and Stuart Oskamp. 1989. "Ingroup Biases and the U.S.-Soviet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45(2):73-89.
- Caprioli, Mary, and Peter F. Trumbore. 2005.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9(5):770-91.
- Converse, Jean M., and Stanley Presser. 1986. *Survey Questions : Handcrafting the Standardized Questionnair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Cottam, Martha L. 1986.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 The Influence of Cognition*. Boulder: Westview Press.
- . 1994. *Images and Intervention : U.S. Policies in Latin America*.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ottam, Martha L., and Richard W. Cottam. 2001. *Nationalism and Politics : the Political Behavior of Nation Stat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Cottam, Martha L., and Zhiyu Shi. 1992. *Contending Dramas : a Cogni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 Cottam, Richard W. 1977. *Foreign Policy Motivation : a General Theory and a Case Stud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DeVellis, Robert F. 1991. *Scale Development : Theory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lif.: Sage.
- Fabick, Stephen D. 2007. "Two Psychologically Based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Enemy Images and US & THEM." *Journal for Social Action in Counseling & Psychology* 1(1):72-81.
- Gibson, J. L., and A. Gouws. 1999.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 Attributions of blame and the struggle over aparthei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501-17.
- Gibson, James L., and Amanda Gouws. 2005. *Overcoming intolerance in South Africa : experiments in democratic persuasion*. 1st pbk. ed.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rmann, Richard. 1986. "The Power of Perceptions in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Do Views of the Soviet Union Determine the Policy Choices of American Lead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4):841.
- Herrmann, Richard K. 1985. *Perceptions and Behavior in Soviet Foreign Policy*.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Herrmann, Richard K., and Michael P. Fischerkeller. 1995.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3):415-50.
- Herrmann, Richard K., James F. Voss, Tonya Y. E. Schooler, and Joseph Ciarrochi. 1997.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3):403-33.
- Holt, R. R. 1989. "College-Students' Definitions and Images of Enem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5(2):33-50.
- Holt, R. R., and B. Silverstein. 1989. "On the Psychology of Enemy Images - Introduction and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45(2):1-11.
- Hoyt, Paul D. 2000. "The "Rogue State" Ima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Global Society* 14(2):297-310.
- Hurwitz, J., and M. Peffley. 1990. "Public Images of the Soviet-Union - the Impact on Foreign-Policy Attitudes." *Journal of Politics* 52(1):3-28.
- Jervis, Robert, and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1970. *The Logic of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en, Sam. 1986. *Faces of The Enemy - Reflections of The Hostile Imagination: The Psychology of Enmity*. 1st ed. San Francisco: Harper & Row.
- Koopman, Cheryl, Jack Snyder, and Robert Jervis. 1989. "American Elite Views of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5(2):119-38.
- Mackie, Diane M., and Eliot R. Smith. 2002.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New York: Psychology Press.
- Marcus, George E. 1995. *With Malice toward Some : How People Make Civil Liberties Judgments*. Cambridge ;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ray, S. K., and J. A. Cowden. 1999. "The role of "enemy images" and ideology in elite belief syste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3):455-81.

- Nadler, Arie, Thomas E. Malloy, and Jeffrey D. Fisher. 2008.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Reilly, K. P. 2007. "Perceiving Rogue States: The Use of the "Rogue State" Concept by U.S. Foreign Policy Elites." *Foreign Policy Analysis* 3(4):295-315.
- Oppenheimer, Louis. 2006. "The Development of Enemy Images: A Theoretical Contribution." *Peace & Conflict* 12(3):269-92.
- Parkhurst, Jocelyn. 2004. "Dependent of the Enemy to Rogue State Image: The Success and Failure of Deterrence in Iraq and North Korea." I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arriott Hotel, Portland.
- Rieber, R. W. 1991. *The Psychology of War and Peace : the Image of the Enemy*. New York: Plenum Press.
- Silverstein, Brett, and Catherine Flamenbaum. 1989. "Biases in the Perception and Cognition of the Actions of Enem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5(2):51-72.
- Spector, Paul E. 1992. *Summated rating scale construction : an introduction*.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Spillmann, Kurt R., and Kati Spillmann. 1991. "On Enemy images and conflict escal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3(1):57.
- Stanton, J.J. 2002. "Terrorism in cyberspace: Terrorists will exploit and widen the gap between governing structures and the public."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1017-32.
- Stuart, Douglas, and Harvey Starr. 1981. "The "Inherent Bad Faith Model" Reconsidered: Dulles, Kennedy, and Kissinger." *Political Psychology* 3(3/4):1-33.
- Yatani, Choichiro. 2009. "With Us or Against Us: American Images of the Enemy in a Global Community." *Conference Papers - Law & Society*:1.
- Yatani, Choichiro, and Dana Bramel. 1989. "Trends and Patterns in Americans' Attitudes Toward the Soviet Un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5(2):13-32.

| 제2회의 (15:30~17:10) 계통분류와 지원모델

사회 : 이순형(생활과학)

주제③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 한반도 다람쥐의 종 분류와 계통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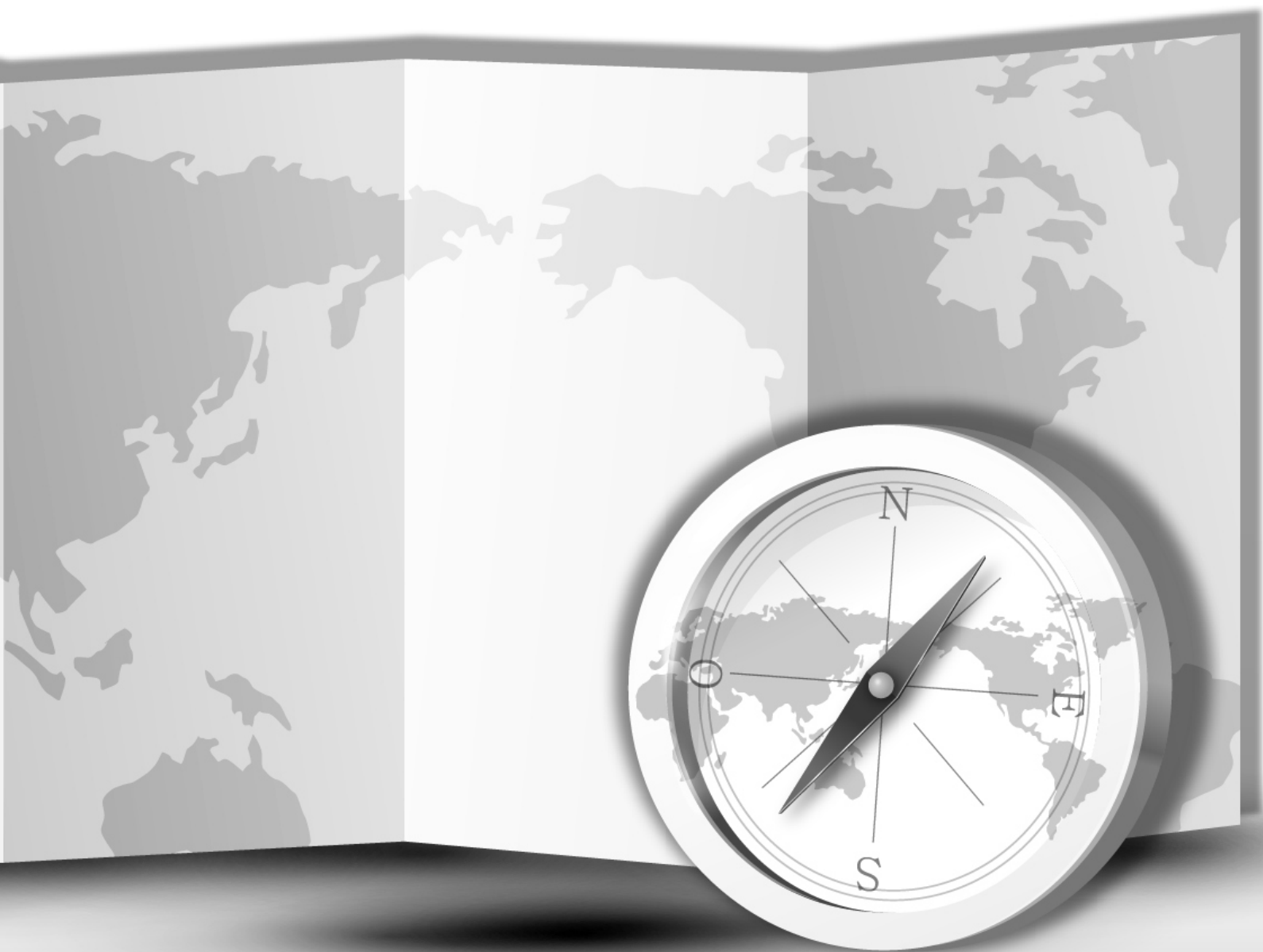
발표 : 이 향(수의생화학)

토론 : 김 원(생명과학부)

주제④ 남한에 정착한 탈북주민을 위한 보건의로 지원체계 모델개발

발표 : 박상민(가정의학)

토론 : 김종홍(국립의료원)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한반도 다람쥐의 종 분류와 계통지리

이 항¹, 정종렬², 민미숙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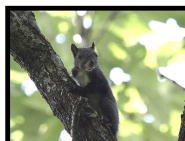
¹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²일본 조선대학교

한국의 포유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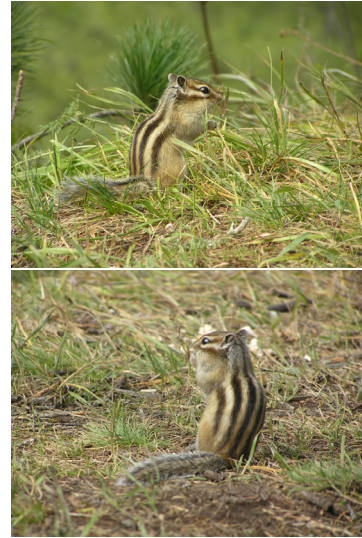
8목 35과 51속 122종



다람쥐 (*Tamias sibiricus*)



- 전 세계 25종
- 유라시아에는 단지 한 종 *Tamias sibiricus*만이 서식
- 분포지: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한반도
- 애완동물로서 인기→유럽지역에 도입
- 주로 땅에서 서식하고 나무를 아주 잘 탐
- 등쪽에 5줄의 줄무늬가 있고 황갈색을 띠
- 동면



분류학적 위치



Order Rodentia (설치목)

Family Sciuridae (청설모과)

Genus *Sciurus* (청설모속)

Sciurus vulgaris (청설모)

Genus *Tamias* (다람쥐속)

Tamias sibiricus (다람쥐)

Genus *Pteromys* (하늘다람쥐속)

Pteromys volans (하늘다람쥐)



연구의 필요성: 통일·평화, 정치·사회적 측면



- 남북한 동물학자 공동연구로 한반도 고유종 확립
- 남북한 공동 생물자원 확보
- 생물자원은 미래의 남북 양쪽의 공동자산
- 통일을 대비하여 한반도 생물주권 보호
- 순수학술 분야에서 남북협력 관계 증진의 돌파구 마련

※ 직접적 남북공동연구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불안정하고 연구추진 전망이 불투명

연구의 필요성: 학술적 가치 (계통분류·진화 관점)



- ✓ 남북한 다람쥐의 종 분류 체계를 재검토하고 종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
- ✓ 현재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북한산 다람쥐의 종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 한반도 전역 다람쥐의 종 분류체계를 확립할 수 있음.
- ✓ 남북한 다람쥐의 종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 한반도 고유종을 확인할 수 있음.
- ✓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과 생물주권의 증거자료가 됨.
- ✓ 그러므로 다람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남북한 고유의 생물자원으로서 본 과제를 통해 통일 후 국제적 생물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할 수 있음.

연구의 필요성: 학술적 가치



(계통분류·진화 관점)

- ✓ 남한의 다람쥐는 중국 및 러시아의 다람쥐와 유전적, 형태적으로 전혀 다른 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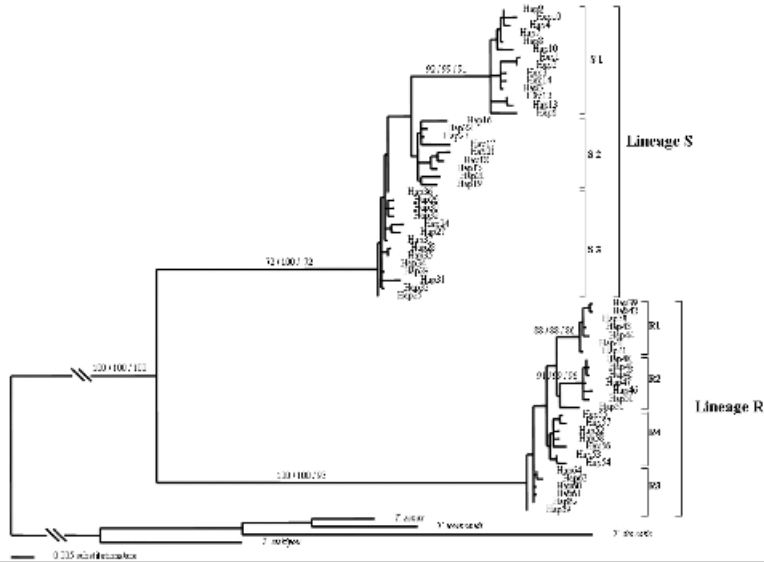


그림 1.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b* 유전자를 이용한 남한, 러시아, 중국 집단의 계통수

Lee et al (2008)
Koh et al (2009)

연구의 필요성: 형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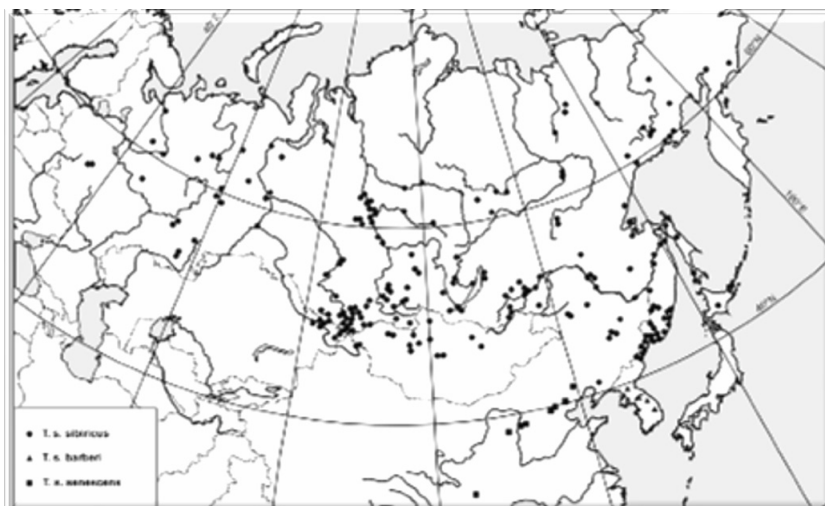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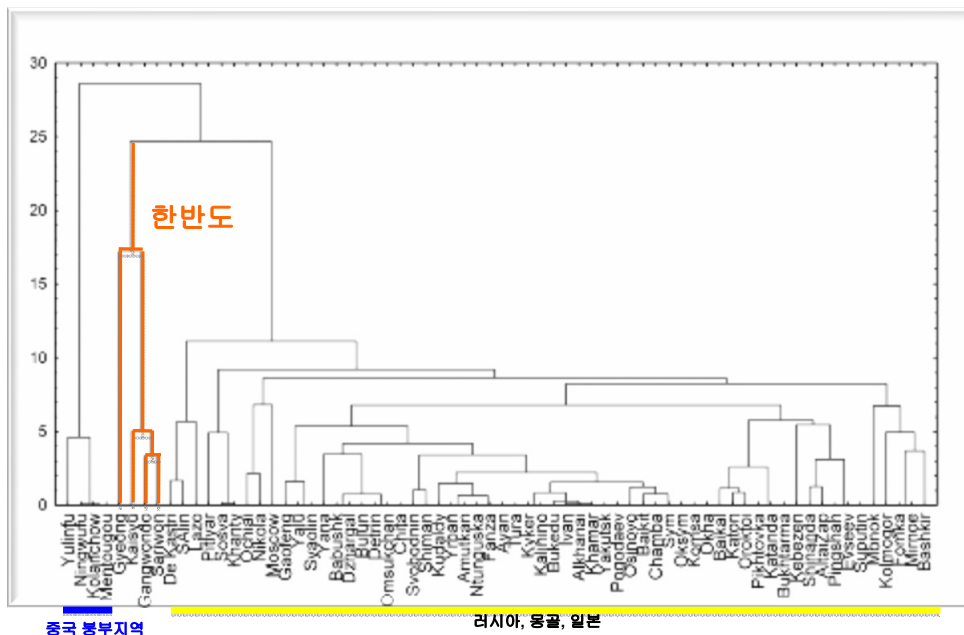




그림 3. 17개의 두개골 형질을 이용하여 그림 계통수



(Obolenskaya & Lee et al, 2009)

연구의 필요성: 학술적 측면 (계통지리와 기후변화 관점)



- ✓ 남한의 다람쥐는 강원도, 충청도, 남부지역 세 지역 개체군이 유전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유전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경우는 남한을 제외하고 유라시아 어느 지역의 다람쥐 개체군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 ✓ 그렇다면 북한지역의 다람쥐 개체군에도 이러한 지역적 분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북한지역의 다람쥐는 남한의 다람쥐와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왜 남한 또는 북한의 다람쥐 개체군에 이렇게 세밀한 지역적 분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한반도 다람쥐의 유전적 특성인가 또는 한반도의 환경지리적 영향때문인가?
- ✓ 유라시아 대륙의 지질 역사는 다람쥐와 동물의 진화와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특히 최신세(Pleistocene) 빙하기와 간빙기의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삼림지대의 수축과 팽창의 역사가 다람쥐의 MtDNA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가?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지역은 최신세 시기 다람쥐의 진화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북한 또는 남한 지역이 빙하기에 다람쥐의 피난처(refuge) 역할을 하였을 것인가?
- ✓ 지리적 장벽과 유전적 분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다람쥐 집단간 유전자 흐름의 단절을 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가?
- ✓ 빈번한 빙하기와 간빙기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은 최신세의 다람쥐 진화과정을 분자계통지리 연구에 의해 복원시킴으로 향후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동물상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

연구의 필요성: 생물자원 보호 관점



- ✓ 외래종, 밀렵, 밀거래로부터 생물자원 보호 및 관리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 ✓ 국내에는 많은 다람쥐가 애완용으로 밀렵, 밀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애완용 다람쥐는 국내산인가 혹은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 된 것인가? 국내산이라면 국내 어느 지역에서 유래한 것인가? 애완용 다람쥐 포획과 거래에 의해 국내 야생 다람쥐 개체군에서 잡종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다람쥐 불법포획, 밀렵, 밀거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 일본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다람쥐는 한국에서 유래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유래한 것인가?
- ✓ 북한의 경제상황에 따라 혹시 중요한 생물자원의 밀반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물자원의 밀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연구 목적



1. 북한산 다람쥐의 분류체계를 재점검하여 남북한 다람쥐를 유라시아 대륙계 다람쥐와는 별개의 새로운 종으로 확립
2.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분석으로 북한 전 지역 및 남한 도서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다람쥐 개체군의 분자계통지리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종의 관리단위 확립



연구자료

- ✓북한 내 다람쥐 유전자시료
- ✓남한 내 다람쥐 유전자시료
- ✓중국 및 몽골 다람쥐 유전자시료



북한 내 유전자시료

- ✓공동연구자의 북한 내 네트워크
- ✓북측 보조연구자의 직접 포획

그림 4. 북한산 다람쥐의 샘플링 지역



표 1. 북한산 다람쥐의 샘플링 지역, 개체 수, Map ID

샘플링지역	개체 수	샘플종류	Map ID
평안남도 대동군	3	가족	A
황해북도 연산군	2	가족	B
평안북도 구장군	1	가족	C
자강도 동신군	1	가족	D
평안북도 향산군	1	가족	E
평안북도 창성군	1	가족	F
평양시 모란봉	1	가족	G
양강도 삼지연군	4	가족	H
양강도 보천군	1	가족	I
전체	15		

국내 유전자시료



- ✓ 조사지역
강화도, 울릉도, 거제도
완도, 가덕도, 보길도
- ✓ 조사방법
3일-5일 조사지역방문 후
직접 포획시도
- ✓ Sherman trap



중국 및 몽골 유전자시료



- ✓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의 해외
공동연구기관 네트워크
- ✓ 직접 방문 포획



연구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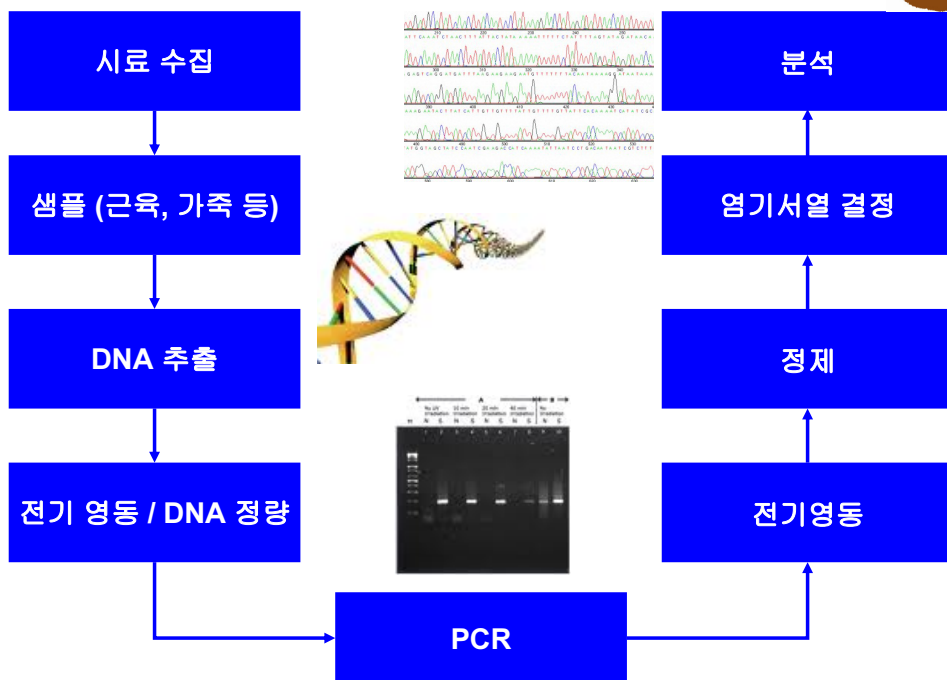
표 2. 북한, 중국, 몽골에서 수집된 유전자 시료의 지역정보, 개체수, 샘플종류

지역	샘플링지역	개체 수	샘플종류
북한	평안남도 대동군	3	가족
	황해북도 연산군	2	가족
	평안북도 구장군	1	가족
	자강도 동신군	1	가족
	평안북도 향산군	1	가족
	평안북도 창성군	1	가족
	평양시 모란봉	1	가족
	양강도 삼지연군	4	가족
	양강도 보천군	1	가족
		15	
중국	흑룡강성 다일링	7	근육
	흑룡강성 하얼빈	3	가족
몽골		2	
	총 수	27	

표 3. 남한에서 수집된 유전자 시료의 지역정보, 개체수, 샘플종류

샘플링 지역	개체 수	샘플종류
울릉도	2	근육
강화도	1	근육
전라남도	3	근육
강원도	2	근육
서울시내	8	근육
전체 수	16	

연구방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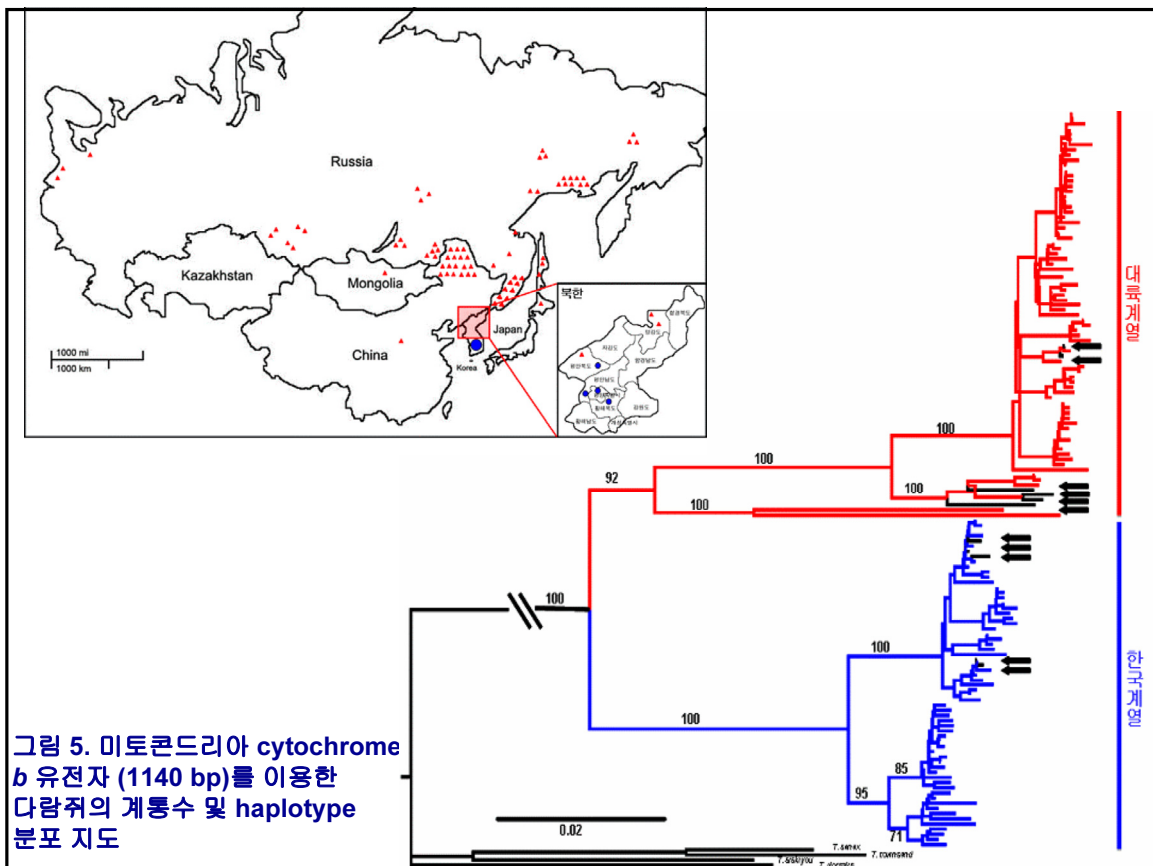
- ✓ 계통수 작성 및 네트워크 분석
PAUP/MEGA/PHYML
SplitTree/Network
- ✓ 유전적 다양성 지수
DNAsp
Arelqu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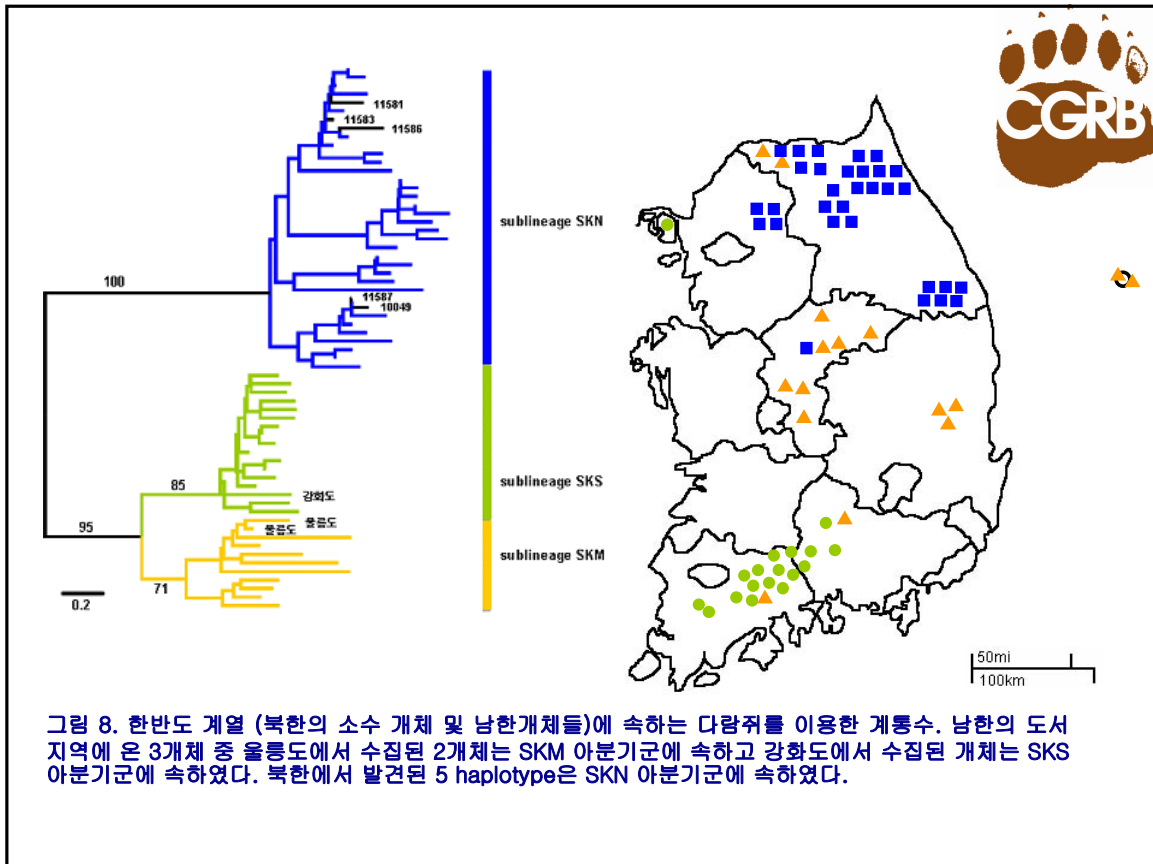


연구결과



- ✓ 북한산 다람쥐 15개체, 중국 및 몽골에서 수집된 12개체, 한국의 도서 및 내륙 지역에서 수집한 16개체에서 DNA를 추출, 성공적으로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b*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결정
- ✓ 계통분류 및 계통지리학적인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로 얻어진 181개체를 포함하여 분석
- ✓ 총 224개체로부터 154개의 haplotype 발견





유전적 거리 (K2P)

	1	2	3	4	5	6
Sublineage 1						
Sublineage 2	0.041					
Sublineage 3	0.104	0.104				
Sublineage 4	0.110	0.108	0.105			
Sublineage 5	0.112	0.107	0.105	0.015		
Sublineage 6	0.112	0.108	0.109	0.033	0.033	

Sublineage1: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북한;
 Sublineage3: 중국 내륙;
 Sublineage5: 남한의 전라도, 경상남도;

Sublineage2: 북한, 중국
 Sublineage4: 남한의 경기도, 강원도
 Sublineage6: 남한의 충청도, 경상북도

결과



- ✓ Bradly and Baker (2001)의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에서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b* 유전자 이용 시 10% 이상의 유전적 거리는 종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
→ 2종 이상이 존재 할 가능성
- ✓ 연구를 통해 빙하기 시기 때의 정확한 피난처(refuge)를 파악하는데에는 어려움
- ✓ 다수의 피난처가 있었을 가능성 확인 (한반도, 러시아 magadan 지역, 중국 혹은 러시아 극동지역, 러시아 중부 내륙)
- ✓ 두 계열의 정확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시료 수집과 확보가 필요
 - ✓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평안북도에서의 집중적 시료 수집이 필요

결론



- ✓ 북한 내 대륙계열과 한국계열, 두 계열의 다람쥐가 동시에 존재함
- ✓ 한반도 다람쥐의 고유성 확인
- ✓ 남북한 생물학자의 장기적 공동연구 가능성 확인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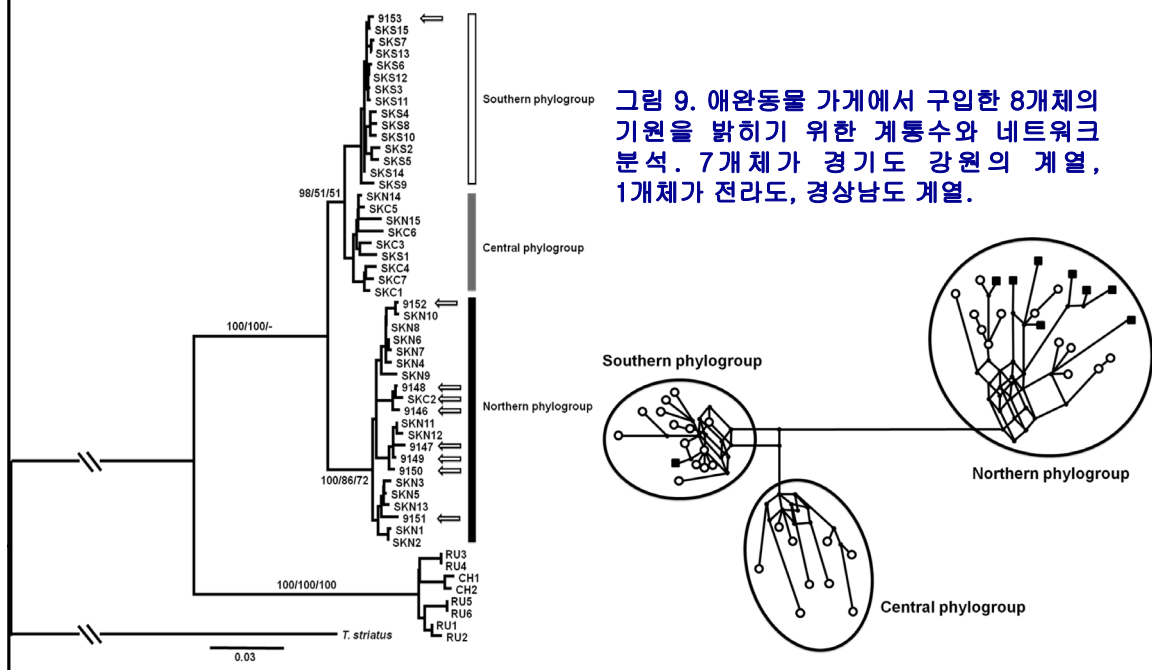
- 두 계열이 동시에 존재하는(sympatric) 지역이 있는가?
- 두 계열의 잡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두 계열의 분포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두 계열의 유전적 교류를 억제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애완용 다람쥐의 기원



- ✓ 다람쥐는 인기 있는 애완동물 중 하나
- ✓ 애완동물 가게에서 소매되고 있는 다람쥐가 어디에서 왔는지 검증되지 않았음
- ✓ 서울시내 3군데 애완동물 가게에서 총 8개체를 구입
- ✓ 기원 추적을 위해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b* 유전자 결정, 비교분석

애완용 다람쥐의 기원



CGRB

이무영, 김영준, 이서진,
박선경



러시아

Andrey A. Lissovsky
Kartavtseva Irina
Inna Voloshina
Polina Perelman

중국

Ya-Ping Zhang
Li Yu
Junfeng Pang
Renzhu Piao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CGRB)에
샘플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모델 개발

Developing model of health care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in South Korea

연구책임자: 박상민(의과대학 의학과)
공동연구원: 정효지(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조연구원: 정선심(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이기현(의과대학원 의학과)
이충형(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박영수(사회과학대학원 인류학과)
홍남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생사를 넘나드는 혹독한 경험을 거쳐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주민은 사회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남한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를 겪게 된다. 북한이주민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매우 높으나,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에 속한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1)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및 재화의 ‘가용성’, 2)이해당사자들 및 관련 집단들의 ‘채택’ 여부, 3)경제적인 ‘감당능력’, 4)의사결정 및 정책수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적인 구조화’등의 “Access Frame” 모델을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본 연구자들은 남한에서 북한이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현황을 “Access Frame” 모델을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북한이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모델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북한이주민의 보건의료 지원체계 제안을 위한 문헌 고찰

- 북한이주민의 현황 및 지원제도 고찰
- 보건의료지원체계 고찰에 적합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정리
- 보건의료 서비스 재화의 접근성 장애요인 분석을 위한 ‘Access Frame’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

2) 북한이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 심층면접 조사

-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 대상의 심층 면접
 - 하나센터 보건의료지원 담당자
 - 북한이주민 청소년 교육 대한학교와 연계된 보건의료지원 담당자
 - 탈북정착주민 보건의료 지원 시민단체 대상의 심층 면접
 - 북한출신 의사 재교육을 지원한 의료원 담당자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피드백

3) 국내 다른 이주민 보건의료 지원 사례

- 국내 기관들의 외국인 노동자 보건의료 지원 사례
- 국내 이주민 대상 보건의료 제공 단체 방문 및 심층 면접
 - 이주민 건강협회,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회년의료공제회
- Access Frame에 따른 국내 이주민 보건의료지원체계 현황 정리
- 북한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보건의료 지원 현황의 차이 및 적용점 정리

4) 북한이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 지원체계 모델 개발

- ‘Access Frame’ 근거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 지원체계 방안 마련
- 정리된 보건의료 지원체계 모델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수행

□ 연구 결과

1절. 북한이주민 보건의료지원체계 제안을 위한 문헌 고찰

1) 보건의료지원체계 고찰에 적합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정리: 북한이주민

최근 일부 연구자 및 학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제 3국 체류 및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사회적응과 정착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주민’으로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들에 각 이주 단계에 따라 겪게 되는 보건의료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건강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이주민 집단이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라면 남한의 일반 국민 사이의 건강 차이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주민’의 용어에는 남한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북한에서의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포용성이 전제로 깔려 있다. 외국에서도 이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러한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북한이주민에게 유사한 접근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Access frame 에 대한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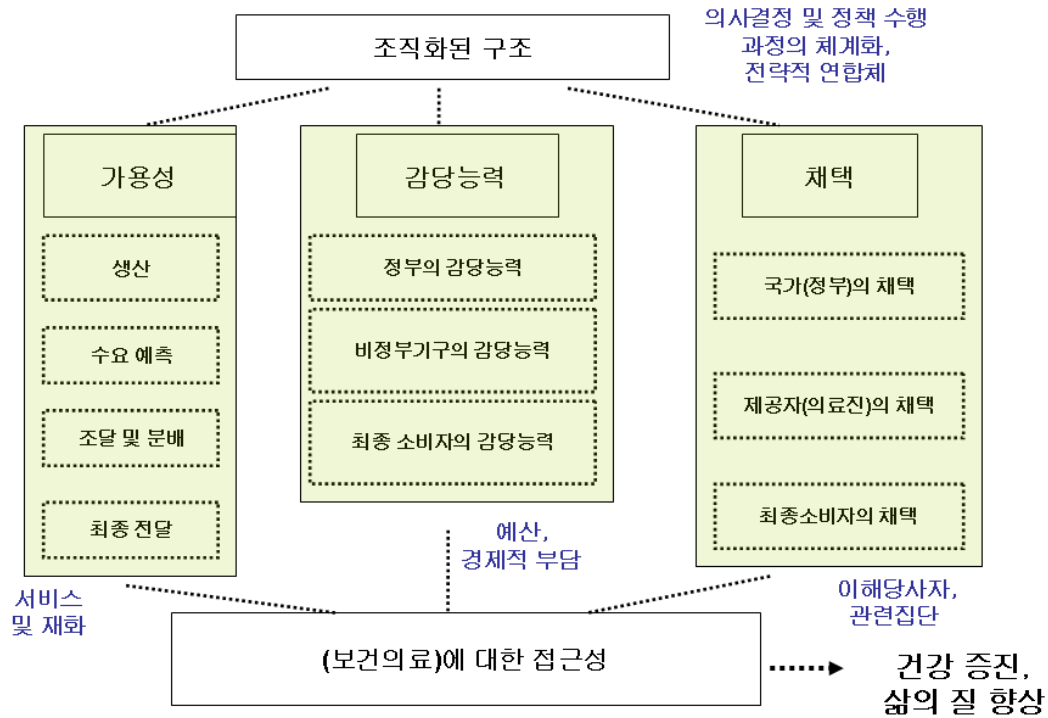
최근 보건의료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취약대상자들이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실제로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 “Access Frame” 모델에 따르면, 1)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및 재화의 ‘가용성’, 2)이해당사자들 및 관련 집단들의 ‘채택’ 여부, 3)경제적인 ‘감당능력’, 4)의사결정 및 정책수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적인 구조화’등이 보건의료서비스가 최종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 가용성(availability)은 보건의료기술이 최종 이용자에게로 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생산(producing), 주문(ordering), 운송(shipping), 저장(storing), 유통(distributing) 및 최종 이용자에게의 전달(delivering) 등 일련의 관리 과정이 포함된다.

- 서비스 및 재화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단체 등 관련 집단들이 탈북정착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동의하고 ‘채택’해야 한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감당능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정부와 비정부기구에게는 해당 서비스 재화 프로그램을 수행·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 재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최종 소비자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지불 능력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 가용성, 채택, 감당능력들이 원활하게 조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인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정부 산하 조직 및 비영리기구, 전문가 집단 및 이해당사자 단체들 사이의 전략적 연합을 이루고, 미션과 목표를 공유하며, 각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Access frame 개념도

3) 북한이주민의 정착 시기별 당면 건강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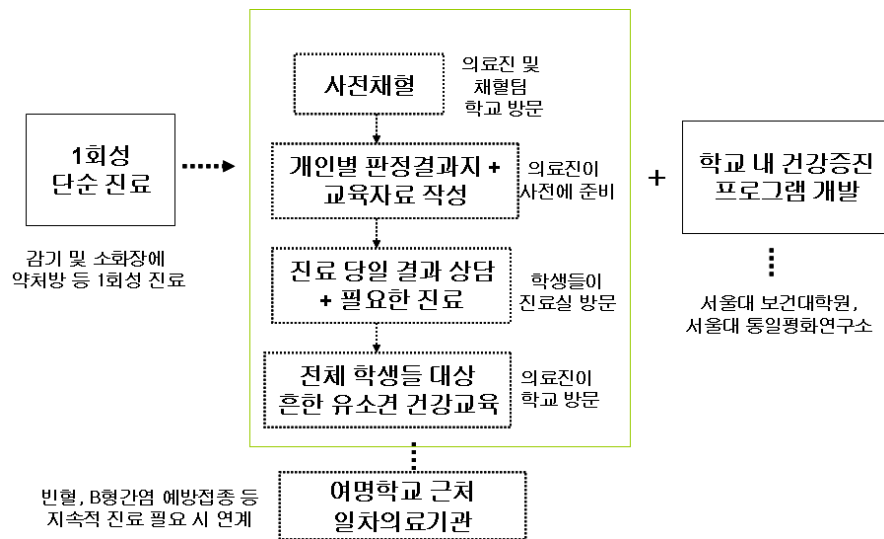
남한에 입국한 후 단기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전염성 질환의 관리 및 예방, 치과적 질환, 흡연, 음주와 같은 나쁜 건강행태의 개선, 그리고 심리사회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주 후 중장기 정착 기간을 거치면서는 만성병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북한이주민 대부분이 젊은 여성인 현실을 고려할 때 성매개질환, 피임, 자궁경부암 검진 등의 산부인과 영역의 상담 뿐 아니라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사회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건의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인 부담 및 문화적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의 보건의료체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의료진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예방/조기검진 및 적극적인 만성병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비하여, 이주민들의 과도한 건강염려증은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잦은 검사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야기하며,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만성병 관리나 조기검진, 건강행태 개선과 같은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왜곡된 의료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2절. 국내 탈북정착주민 보건의료 접근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사례

1) 비정부기구 및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 사례

- 탈북정착주민 지원 교육기관(여명학교)과 연계된 보건의료 지원 사례

1회적인 채혈과 방사선 검사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약처방을 받고 종료되는 형태의 의료봉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2주 전에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채혈 및 신체검사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료 전에 학생 개별적인 검사 결과지와 판정문 및 교육자료를 준비한 후, 진료 당일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검진 결과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함께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의료진 1명이 여명학교를 추후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흔하게 나타난 건강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단체 교육을 1회 수행하여 건강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하고, 탈북정착학생들에게 맞는 건강증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연합하였다.



<그림 2> 탈북청소년 교육기관과 연계된 보건의료 지원 경과 과정

- 비영리단체의 국립의료원 내 의료상담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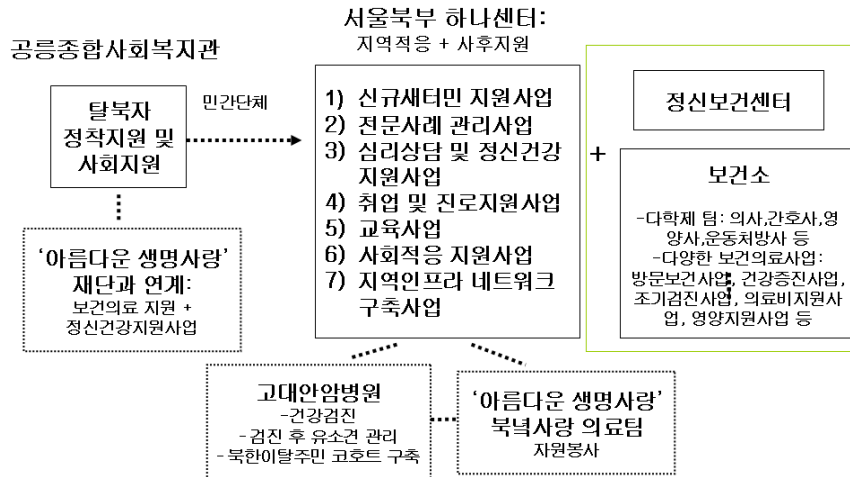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활동(새조위)는 2006년 국립의료원과 협력 하에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를 개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료지원을 시작하였고, 이어 2007년 의료상담실 개소를 통해 의료상담지원을 하게 되었다. 2008년 5월 새조위는 한국 내 탈북자 2천8백53 명을 대상으로 한 ‘탈북자 병원 이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병원 이용의 어려운 점으로는 30%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힘들어서’라고 답하였으며, ‘의료진에게 의사전달이 어렵다’는 경우가

24%, ‘진료 절차가 까다롭다는 경우’도 23%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의료 시설 이용 시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을 알아듣는 것과 상담 시 의견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 등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 내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는 단순진료를 넘어 '탈북민 상담실'을 별도 설치해 운영하는 이로 인하여 민간단체의 의료지원에서 의료상담도 함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출신의 상담원을 두어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상담원은 환자에 대한 접수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할 뿐 만 아니라 병간호 등의 역할도 담당함으로써 북한과 전혀 다른 체제인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시설 이용 시 문제가 되었던 언어·사회문화적 장벽을 낮출 수 있었다. 새조위의 이러한 노력은 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의료 접근도를 향상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사회·문화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출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실 운영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보여진다.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지원 사례

- 공릉동 하나센터 지원 사례

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상담·안내·교육센터이다. 하나센터는 하나원에서 지역사회로 신병 인수 및 초기정착지원을 하며, 크게 3주간의 지역적응 교육과 1년간 체계적인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동반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정착하는 지역인 노원구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북부하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공릉새터민정착지원센터는 탈북정착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인 서울 북부 지역에 위치하며,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초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데에도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릉새터민정착지원센터는 정착지원과 사회지원을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였다. 이에, 의료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 ‘아름다운생명사랑’의 북녘사랑 의료팀 같은 지역사회 및 의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상담서비스 및 병원 연계를 지원하였다. 현재 공릉새터민정착지원센터는 자체적으로 전문상담심리사를 고용하여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정신과 진료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고대안암병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아름다운 생명사랑의 의료봉사자는 북한이탈주민을 고대안암병원에 연계해주어 건강검진, 검진 후 유소견 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대안암병원의 새터민 코호트 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림 3> 공동체 하나센터 보건의료지원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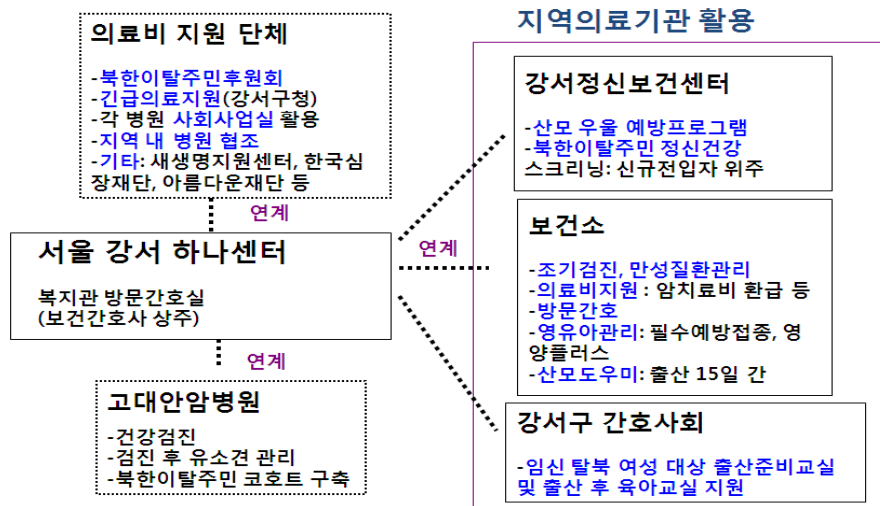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강서새터민지원센터 사례

양천구와 노원구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3년부터 탈북여성의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게 되었다. 2004~2005년도에는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사회적응과 안정된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의 폭을 넓혀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 강서새터민지원센터로 개소하였다. 강서새터민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체계의 특징은 지역사회 의 여러 보건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임기의 젊은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운영한 모델은 다른 하나센터에서도 적용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진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의료이용 감당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할 때 통일부의 정착금 및 지원금 지급과 임대아파트 알선, 노동부의 직업훈련수당 및 고용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및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 자격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의료이용 감당능력은 본인의 경제적인 수준과 보건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중 경제적인 수준은 생계급여 및 취업과 직결되며,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호 자격과 관련이 크다. 생계급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초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



<그림 4>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강서새터민지원센터 보건의료지원 체계

민들이 정상적인 취업보다는 생계급여 및 직업훈련 수당 등 제도에 편승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주민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 치료 등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수급권자 인정기준의 120%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주민의 약 70%가 의료보호대상인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의료보호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된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은 북한이주민들은 본인의 의료보호 자격에서 주어지는 혜택과 생계급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정서가 깔려있어 4대 보험이 제공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주로 일용직을 통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버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이주민의 취업을 장려하여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취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일정기간동안 이들의 의료보호 혜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주민들에게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업장려금 제도의 지급요건이 최근 1년 이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 종전조건에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정기간 동안은 의료보호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취업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로 취업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건의료이용 감당능력을 늘리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이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시 경제적 장벽을 줄여주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의료비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이들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제공하고나 감면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와 단체들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하다.

4) 의사 출신 북한이주민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례

북한이주민들 중에는 북한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다수는 남한에서도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으나, 북한에서의 면허를 남한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북한에서 받은 면허증과 학교 졸업장 등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복지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소정의 학력 인정 절차 과정을 거치면 의사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출신 의사들의 남한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우선, 북한에서 사용하는 의료 용어와 교과서는 주로 러시아어와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어 위주의 의료용어가 사용되는 남한의 현실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되는 약품이나 의료기술 및 진료 인프라가 남한에 비해서 열악하며,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남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2009년부터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고시 과정에서 기존의 필기시험 뿐 아니라 모의 환자를 면담하고 문진하여 적절한 진료를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임상실습시험이 추가로 포함되어서 갈수록 실제 의료 현장에 노출되어 수련 받는 기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의과대학에서 개인적인 지원으로 의사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북한 출신 의사들이 간혹 있었지만, 이러한 면허 취득 절차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서울의료원은 의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북한 출신 의사 중 자원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및 주요 임상과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러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모의 임상실습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일개 의료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2009년 중반에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전국의과대학 학장단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북한 출신 의사들의 임상실습시험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요청하였다. 의과대학 학장단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한 개의 의과대학에서 북한 의사들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 뿐 아니라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이 과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실제로 전국에 있는 북한 출신 의사들 중 자원자에게는 임상실습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이탈주민 중 엘리트들에게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시키며 남한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절. 국내 다른 이주민 보건의료 지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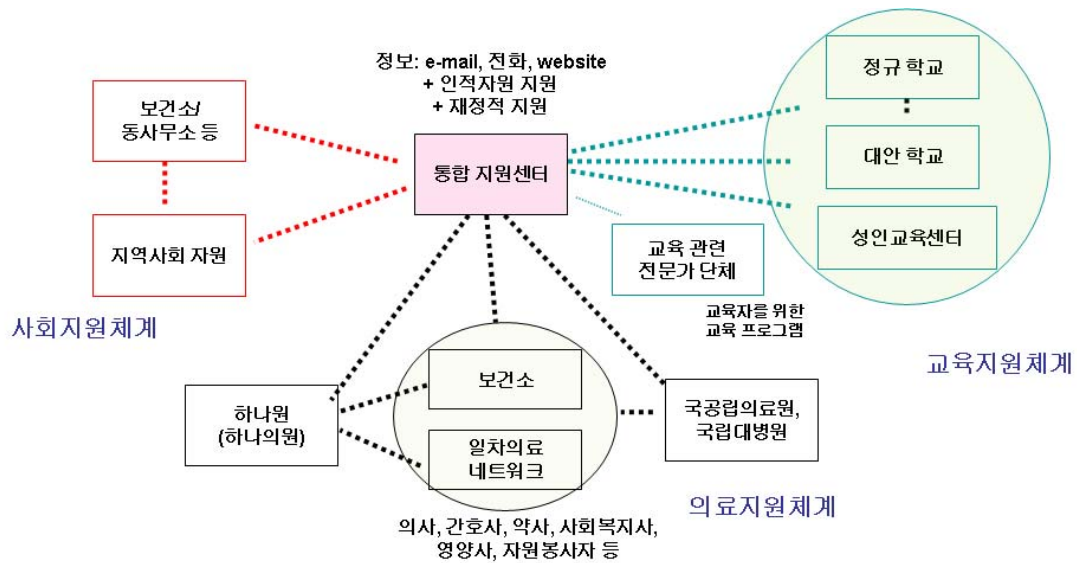
약 1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지원 정책을 북한이주민의 보건의료 지원 정책과 비교하면서 상호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구구성집단이 통합하며 적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성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 이주민은 이주의 경험 및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인해 건강취약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권한은 이들의 출신과 동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북한이주민의 남한사회로의 포섭, 정착 및 정주를 위한 배려는 단기순환 및 노동력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이주노동자에 비해 확연히 다른 정책기조에 반영되어 있다. 조선족은 전통적인 동포나 혈연개념에 기초할 때 북한이주민에 더 가깝지만, 실제 정책은 타국 이주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순환제의 큰 틀에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비교적 출입국과 사업장의 이동이 자유로운 특례가 허용되는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다.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착 및 정주지원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조선족을 포함한 타국 이주노동자에 비해 북한이주민이 국민의 개념에 더 가깝다는 계서화된 서열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계서적 민족개념은 북한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서비스를 비교하고 차이를 해석할 때에도 유효하다. 차이점을 요약하면 북한이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는 1) 공적 건강보험체계 내로의 포섭, 2) 정착 및 정주를 지원하는 하나센터를 거점으로 지역들을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정책의 중심이다. 이는 점차 확대 실시되어 갈 전망이나 이에 따르는 민간의료자원들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는 공적 건강보험체계내로의 편입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예방이 아닌 치료 위주의 일회성,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료공제회를 포함하여 경험이 쌓인 민간의료자원이 미등록이주민을 포함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의료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산개되어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구심점이 부족하다. 공적 건강보험체계로의 편입과 정착 및 정주 지원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차이점은 북한이주민이 계서적 민족개념에서 통제해야 하는 '노동력'인 이주민보다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의 개념에 더 가까이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는 수요와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예방적 서비스,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관리를 포괄하는 일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4절.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주민을 위한 Access frame에 근거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모델 안

- 1)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형 사회지원, 교육지원 및 보건의료지원 지원체계 구축:
‘조직적인 구조’ 측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지원, 교육지원 서비스와 보건의료지원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된다면,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북한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보건의료지원센터를 따로 수립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각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며, 이러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조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조정을 담당할 지역의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지원체계에서 수행할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심의 하나센터도 이러한 모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림 5>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형 지원체계

2) 북한이주민의 위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서비스 재화의 ‘가용성’

지역 사회 내에서는 보건소 및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북한이주민을 위한 ‘일차보건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하나원에서부터 파악된 북한이주민의 건강문제를 지역사회의 담당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는 모델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하나센터 중 일부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보건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여 북한이주민의 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하나센터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자원을 북한이주민에게 적합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차보건의료 프로토콜’에는 북한이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접종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만성병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넘어서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이주민의 언어·사회·문화적인 장벽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

3) 이해당사자 및 북한이주민의 수용능력(‘채택’) 향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북한이주민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과 남한은 신체 증상을 표현하는 용어 뿐 아니라 성장하고 겪어 온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북한이주민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용어를 정리하고 적용하며, 언어-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의료인력이 아니라도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접할 때 느끼는 언어·사회문화적 장벽을 완충할 수 있는 상담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북한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의료원 및 국공립병원들이 북한이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공립 의료기관의 평가 체계에서 공공의료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공공성 평가에서 북한이주민의 위한 진료실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소-의료원-국공립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포함한다면 보건의료제공자들의 채택이 증가할 것이다.

4) 북한이주민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국내외 수용능력(‘채택’) 향상

최근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주민의 절대 숫자는 아직 남한 전체 인구의 0.04%(2만명 미만)에 불과한 소수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1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문제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전체적인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다문화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북한이주민을 포함한 여러 소수집단들에 대한 지원을 집단별로 별도의 기관이나 시설을 따로 두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 기인하는 북한이주민의 다른 특성인 ‘통일 이후의 준비’라는 면도 남한 내에서 함께 연계하여 협력할 파트너를 확대하는데 중요하다. 반세기 이상 단절되어 있던 사회에서 대규모의 인구 교류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북한이주민이 겪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은 남한 사회에게 주어진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아직까지는 북한이주민의 절대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으나, 이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경험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주민 코호트나 패널을 정책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면, 학계의 다양한 연구자들을 참여시켜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5) 북한이주민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경제적 ‘감당능력’ 향상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주민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우선순위를 올리는 노력은 결국 이러한 정책 및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후원금을 확보하는 것과 맞물려 진행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감당능력’이 일회성인 예산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구조’적인 측면, 서비스 재화의 ‘가용성’ 및 수용능력(‘채택’)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 개별적인 치료비 지원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북한이주민의 건강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정책 및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나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여러 보건의료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북한이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보건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일차의료 프로토콜 개발 및 보급과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기획 및 평가 등에 대한 예산 책정 및 사업자 발굴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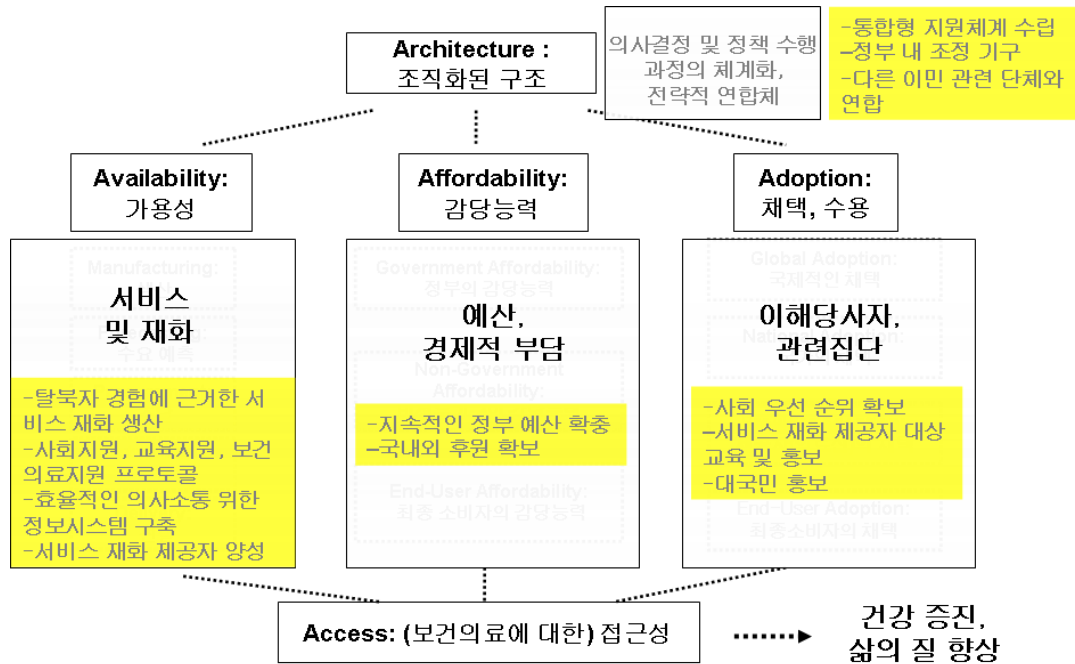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재정적 감당능력 뿐 아니라 북한이주민 본인의 감당능력도 보건의료의 접근도에 큰 영향을 준다. 궁극적으로 북한이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적 감당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 재정적인 감당능력을 키우면서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취업장려금 지급조건의 완화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북한이주민들이 일정기간 동안은 의료보호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취업과 함께 인센티브로 취업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건의료이용 감당능력을 늘리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결론 및 제언

북한이주민을 위한 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1)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재화를 파악하여 생산하고 배분하며 전달하는 ‘가용성’과 2)정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단체 등 관련 집단들이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동의하고 ‘채택’하는 과정과 3)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감당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4)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인 구조화’ 및 전략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탈북정착주민 코호트를 정책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면,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주민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우선순위를 올리는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 및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가지는 건강 문제에 대해 선별하고 지지하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연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인의 협력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주민들이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지원, 교육지원 체계와 연계해서 상호 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회지원, 직업 연계, 교육,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북한이주민 지원 체계를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6> 북한이주민을 위한 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 방안

<참고문헌>

Choi SK, **Park SM**, Joung H. Still life with less: North Korean young adult defectors in South Korea show continued poor nutrition and physique. *Nutr Res Pract*. 2010 Apr;4(2):136-41. Epub 2010 Apr 28.

Laura J. Frost & Michael R. Reich. *Access: How do good health technologies get to poor people in poor countries?*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2008). *Re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Walker SP, Gaskin P, Powell CA, Bennett FI, Forrester TE, Grantham-McGregor S. The effects of birth weight and postnatal linear growth retardation on blood pressure at age 11-12 year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2001;55:394-8.

- Jeon WT, Hong CH, Lee CH, Kim DK, Han M, Min SK. Cor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 Trauma Stress* 2005; 18(2): 147-54.
- Lee YH, Lee MK, Chun KH, Lee YK, Yoon SJ. Trauma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 J Prev Med* 2001; 20(3): 225-229.
- Montgomery E, Foldspang A. Discrimination, mental problems and social adaptation in young refugees. *Eur J Public Health* 2007:1-6.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개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사업 교육자료』, 통일부, 2009.
- 김선화. 하나센터와 지역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 민관합동 민간단체연대 워크숍 자료집,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9.
- 김영춘, 김성진.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08.
- 김철한.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방안에 관한 세미나: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특성. 통일부, 2009.
- 김희진.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방안에 관한 세미나: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결핵 실태. 통일부, 2009.
- 문정주 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
- 박상민.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방안에 관한 세미나: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건의료 지원체계. 통일부, 2009.
- 박상민.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를 위한 일차의료. *가정의학회지* 2009;30:91-97.
- 설동훈 외. 외국인노동자 보건의료실태 조사연구.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2005
- 설동훈. 혼종 혹은 혼혈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2007;52:126-151.
- 송윤미. 역학과 사회역학. *예방의학회지* 2005;38:237-240.
- 신미녀, 김병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모형 개발. *통일문제연구* 2009;21:493-537.
- 신미녀.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방안에 관한 세미나: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활동현황과 개선방안. 통일부, 2009.
-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9;2:189-213.
- 윤인진, 김숙희. 국내 탈북자의 건강 및 의료. *보건과 사회과학* 2005;17:149-182.
-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007;2.
- 윤인진. 북한이주민. *집문당* 2009.
- 윤영상 외. 2005. 2005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정숙.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기초교

- 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9.
- 윤재영.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방안에 관한 세미나: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건강특성. 통일부, 2009.
- 장남수, 강은영, 이종미, 이명근. 연변지역 탈북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위와 식생활 양상. 한국영양학회지 2000;33(3): 324-31.
- 전진용.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방안에 관한 세미나: 하나원 진료를 통해 바라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 통일부, 2009.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사회와 이주민 건강 -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2. 청년의사. 2009.
- 홍승권 외.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방안.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사업단. 보건복지부. 2006.
- 황나미.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문제와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89:37-50.